

第215回國會
(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5日(火)

場 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審査된案件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1

(10시12분 개의)

○委員長 張在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다른 부처는 차관님들께서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답변시간에는 장관님들께서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로 양당 간사간에 합의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오전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듣고 속개하여 질의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裴基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裴基善委員 경기도 부친 원미읍 출신 裴基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그리고 늘 국정에 수고가 많으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94조 9,3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6조1,000억원을 합쳐 101조300억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이래 최초로 정부의 재정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 예산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큼니다. 정책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증가하는 재정압박속에서 예산안 마련에 고심했을 총리 이하 관계 장관님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편의 국가재정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200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나치게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 2.5%, 경상 GDP성장률 8.5%로 가정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인 올 상반기에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어 왔고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구조개혁 기업인 대우자동차에 대한 포드 인수포기와 법정관리로 대내외

적 경제여건이 상반기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증시가 장기 침체국면으로 들어서는 등 시장의 불안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경제지표들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예산 증가율이 본 예산 대비 9%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도 GDP 대비 20.7%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실제로 조세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으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도 지난해의 232만원에서 25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계층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대책을 강화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제2차 기업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한국전력 등 최근 소위 공기업 개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기업의 개혁이 가장 더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노조의 파업선언과 양대 노총의 동조 파업문제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수습이 되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공기업 개혁과 노동조합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의약분업 시행과정이나 의료보험 통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과 최근 농어가 부채탕감 문제에 대한 농민시위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정부의 준비부족과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돌로 인하여 원칙 없이 표류하고 그 때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 달래기식의 예산 증액으로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불만과 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기업 개혁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원칙은 무엇인지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각 지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5%로 상향조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 예산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효율화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인건비예산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기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도 7 내지 8% 정도의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생각한다면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의 고통이 작았던 부분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일률적인 처우개선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

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계서는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최근 공직자의 비리가 증가하고 이익집단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사회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정책 담당자들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가 확실하게 확립되고 공직자 또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매년 해외연수, 각종 공무원 교육 등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라는 말씀을 했듯이 이제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소명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자부장관계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팔십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 위주의 개발경제시대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력했던 분야는 안보와 경제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였으나 우리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된 21세기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교육, 정보인프라, 환경, 문화, 복지 분야로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편성도 이런 문제의식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분야의 투자를 과감히 늘려나가고 있음은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장기투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교육개혁과 과감한 재정투자로 오늘날 인터넷시대에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교육부를 교육인적

자원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점은 재정책보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결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막대한 교육재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 역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에 집중 투여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계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과 과감한 교육재정의 확충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의 국제적 자부심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金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카콜라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1년 예산과 같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장관계서는 노벨상 수상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러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외교, 통상,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수상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살리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활발한 대외 활동계획은 어떻게 마련될하고 계시는지 관계 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조정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국민의 정부의 IMF 극복을 위한 긴급 예산 투여로 인한 부담이 되돌아오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국제 부담과 공적자금 투여로 인한 이자 부담이 9조원이나 되고 있는, 전체 예산의 9%로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의 악화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한국병 치유를 위한 일종의 수술비로 불가피하게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재정소요의 발생으로 인한 재정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조기 완료를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 과 생산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의 증가, 남북 교류 협력시대의 개막으로 인한 예산 조성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신규 예산소요의 발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예산을 운용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의 소리라고 하는 점을 전해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一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潤委員**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정부 여당의 실정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소득불균형으로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고 지방경제와 농촌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부실기업 퇴출 한파까지 몰아닥쳐 온 나라에 실직자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찌다가 우리 경제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는 바로 1년 반 만에 IMF 졸업, 경제위기 완전 극복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어한 이 정권의 조급함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환부 수술에 매진해야 할 때인 지난 총선 때 정부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득표만을 의식해 경제의 실상을 호도하면서 경제위기가 완전 극복됐다고 큰소리치고 다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국무총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 정부가 무슨 염치로 사상 최초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흥청망청 쓰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부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권 출범 전에만 해도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빚만 해도 국정운영을 맡은 지 불과 3년 만에 건국 50년 동안 쌓여왔던 것

과 맞먹는 규모의 빚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여기다가 보험, 연·기금이 안고 있는 잠재부실에다 공적기관 채무까지 합치면 국가부담으로 떠안겨질 빚이 500조원을 훨씬 넘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러니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정부 출범 후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국가빚과 그리고 잠재부실이 어떤 경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경부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팽창예산인데다 절름발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나 증가해 내년도 예상 경상성장률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 투자는 줄이고 인기영합적인 지원성·경직성 지출만 크게 늘린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재경부장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장관이 기획예산위원장으로 재직 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도 2% 낮게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재경부장관께서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11% 이상 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국민 약속을 파괴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64조원이면 된다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109조 6,000억원이나 쓰기도 무슨 염치로 또 4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단 말입니까? 끝도 없는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면서도 부실기업 사주들은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으로 퇴직금 잔치를 벌였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등 감독 당국은 웬일인지 꼴먹은 병어리입니다.

또 정부의 무지로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을 낭비했습니까? 불과 5,000억원을 받고 판 제일은행에 1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했고 대우자동차는 포드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까?

재경부장관!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초래한 1차기업·금융 구조조정은 민간부실을 정부부실로 바꿔준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실패로 끝난 1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공적자금의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 대우사태 이후 투신 부실이 문제가 되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는데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 투신권으로부터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이탈해 증시침체는 물론이고 회사채시장마저 마비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투신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면서 소신 아닌 소신으로 버티던 정부가 결국 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돈은 돈대로 쓰고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 망친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대우채 원리금에 대해 95%까지 보상해 주도록 한 것은 관치금융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처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 조치로 투신에 대한 투자자책임 원칙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정작 투신 부실이 문제가 되자 투자자책임 원칙 운운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계속 미뤄 결과적으로 막대한 공적자금만 낭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농어촌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동결시키고 경직성, 지원성격이 큰 복지비, 교육비, 대북지원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와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내년 총예산의 10% 가까운 9조 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내년 후년에 각각 26조 그리고 2003년에는 원금만 무려 40조원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직성 지출마저 대폭 늘린다면 우리 재정은 반신불수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본 위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총규모의 2조원 이상을 삭감해서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7% 이하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관, 준비 안 된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이 금년보다 무려 5,800억원이나 늘어난 1조

9,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 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 연금 및 보험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계상된 금액을 삭감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2조원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9년 말 현재 248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9% 수준에 불과하고 50% 미만인 지자체도 17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자체의 빚은 계속 늘어나 약 18조원에 달해, 교부세를 포함한 총수입의 40% 이상을 부채상환에 쓰는 시도만 해도 부산, 강원, 광주 등 6개에 이르고,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낮아야 할 지자체가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원의 적정한 지방이양과 함께 재정능력을 넘는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 시 신용평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서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미국의 파산제나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가 부실을 해결해 주되 엄격한 재정통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두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한숨과 절규만이 가득한 가운데야반도주하다 못해 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농가부채 대책은 농업경영개선자금 5,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용 125억원이 유일하게 반영되어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2년 유예 조치한 부채상환 시기가 도래하는데도 후속대책마저 전혀 없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 ha당 20만원 내지 25만원으로 평당 100원도 안 되는 예산이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농가부채는 우리 당이 제출해 놓은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특별조치법안과 같이 2004년까지 정책자금 중 매년 2조원을 2년간 상환 연장 조치해 주고, 논농업직불제도 ha당 50만원 수준은 돼야 합니다. 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및 2001년 완전개방에 대비한 축산농가 보호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정권 집권 3년 동안 인사편중만 심화된 것이 아니라 지역편중 예산도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최근 3년간의 철도사업 투자만 보더라도 호남권은 6,580억원인데 비해 영남은 단 200억원에 불과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호남권은 3,200억원인데 비해 영남은 단 50억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북지역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중단, 감포관광단지 중단, 경주경마장 중단, 감포댐 중단 등 지난 정권까지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사업들이 하나같이 중단, 취소되면서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역편중, 지역차별이 이렇게 극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장관,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대구 이남 구간은 현정권이 출범한 98년 추경예산부터 내년예산까지 4년간 이 정부가 단 한 푼도 넣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년예산에는 최소한 500억원 이상을 계상해서 용지매입과 문화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전력 노조가 어제 전면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발전 자회사 직원들 임금과 수당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로 8개항의 이면계약으로써 노사합의가 되었다고 아침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첫 단추가 정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이면계약을 하면서까지 허둥지둥하고 있으니 앞으로 과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나갈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큼니다. 이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金榮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煥委員 단 10%의 지지만 있더라도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대েষ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저녁 12시에 예결위를 마치고 국회 본관을

나서는 순간에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박이 세차게 때리고 있었는데 경기도 안산으로 가는 제 차창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예결위장에서 하는 많은 얘기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모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회의 직원 여러분!

우리가 아마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면서 쪽방에서 움츠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예결위장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말입니다. 혼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우리는 지금부터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갇혀 있었던 서울구치소 6층 상 15房에는 이런 글귀가 감옥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칫솔대로 눌러 적은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큰 일을 맡기려는 사람과 민족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과 큰 시련을 준다.”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위기가 없이는 전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진하는 자만이 위기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결연하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질서와 우주를 창조하던 창세기 그날에도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혼란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개혁을 해 나가지 못하는 일관성과 투명하지 못한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되 민심의 꼬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에 초연할 수는 없지만 인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해 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

약 평화스러운 정권교체의 길을 염원하고 추구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민족의 통일과 화해와 협력의 길을 일관되게 추구해 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과, 우리가 의약분업과,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과, 우리가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해 오지 않았다면, 아니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포기한다면 오늘날의 혼란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보화사회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과 그리고 과학기술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에 예산을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결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지역주의에 올라 타, 걸핏하면 파행과 박살의 정치에 익숙해진 이 정치권이 없었다면 그런 것도 오늘날에 어려움이 덜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부활입니다.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의 전진은 우리 조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도약은 우리 거래의 융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길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우박이 내렸지만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중남미 시장과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은 최근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IMF경제위기 이후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강구를 목적으로 해서 1999년 국제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체계가 제대로 정착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시장의 외환위기 가능성과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나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 등 세계 언론들은 주가폭락 등 자본시장 위축으로 세계경제가 침체 및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과 자본시장발 세계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소위 비상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데이비드 코 IMF 한국 대표 등 일반적으로 3년 전의 IMF경제위기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연말까지 도래할 약 14조원에 달하는 회사채 또는 내년 1/4분기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약 30조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처방만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께서는 지난 1차 구조조정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원칙 없이 임기응변식 땀질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자와 대주주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책임과 책임추궁은 결코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며 구조조정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조조정의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구조조정에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재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 내에 기존 조직 외에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조직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점검·평가할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뒤따랐던 IMF 경제위기는 금반지 모으기, 과소비 자제 등 사회 단합의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 해체와 분열이 야기될 징후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초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내세웠던 사회적 합의 정신이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3일 퇴출기업의 결정, 11월8일 대우자동차 부도, 2001년2월까지 2차 구조조정 마무리 등에 따른 실업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년에 비해 6조5,000억원이나 세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경제전망이 팔구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기반 확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3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약 146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규모인 101조 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2개 공공기금 가운데 내년에도 22개의 기금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부처간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부처들이 첨단분야의 신산업정책을 서로 관장하려고 부처마다 정책자금이나 포상제도를 남발해서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IT 산업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벤처기업 지원을 포함해서 IT표준

제정,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 전자화폐 포럼, 벤처단지 조성, 쇼핑몰 인증제 등 경쟁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두 부처 간의 업무중복 및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게임산업에 있어서 부처 간 다툼과 중복투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망 사업에 대해서도 건교부장관,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께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스니아에서 동티모르에서 유고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는 폭력과 총성에 피흘리는 어린이를 보면서 전율하고 경악하며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저 같은 비극이 없기를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정상회담의 성과가 보다 확대되어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바라는 것은 온 국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남북문제에 관해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대북지원을 두고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에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있는 대로 북한에 퍼다 주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金泳三 정부 5년간의 대북 지원 규모와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규모를 비교·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규모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통일전 서독이 동독에 대하여 지원한 규모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만 있고 점검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사후점검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군사용으로 변하여 남침의 수단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본 위원은 중앙행정부처의

정보화수준과 정보보호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수립 및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 전담인력 보강 및 사업비 편성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의 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배분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예산이 금년보다 16.2% 늘어나서 4조 1,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중복성과 기획·조정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장관과 국무총리께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심의기준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인적현황을 감안할 때 과학분야예산에 대한 심의가 충실한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지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준 사건이나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은 벤처산업의 성장 과정상의 버블로 진단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취약한 시장환경과 함께 벤처정책의 부재가 이러한 결론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는 제도와 법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단계에서 산자부장관께서는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의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된 이후 지금은 모두 16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국내 총전력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리1호기는 원자력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설계수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예방정비가 끝나고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부품의 원활한 수급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증가하는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업체, 이용량,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權五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한나라당 權五乙 위원입니다.

총리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농정이 총체적 실패를 했다, 농가부채는 42.4% 늘고 이농자는 3배 늘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현정부가 농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현재 식량자급도 55% 선이나마 지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부채문제 때문에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도저히 금년도 농산물을 팔아서 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겠다, 사과 값 떨어지고 모든 농산물 값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차라리 우리 보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의 부채로서 우리의 모든 토지, 전지, 농기계 전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정말 이 나라 농업을 포기를 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외국에서 싼 농산물을 사먹도록 그렇게 경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을 이번에 40조 투자를 포함해서 150조 투자를 했습니다. 농업분야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하고 일반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

차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끝나면 짧게 무엇이 다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농민들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고르지 못한 것은 참지 못하겠다 이것이 이 나라 농민들의 지금 주장하는 절규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8조 공적자금 투자하는 것하고 농신보에 몇 천억 해서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됩니까? 재정부 차관님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정서적으로는 저희도 이해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소위 말하는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예금자에 대한 보험 대지급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채권…….

○**權五乙委員** 일단 공적자금이 예금자에 대한 대지급문제라든가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부실채권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입장에서 2차·3차 산업에 공적자금을 150조 투자를 했으면 농업도 1차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농업도 1차 산업으로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논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채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눈 앞에서 왜 거기에는 그렇게 공적자금, 공짜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펴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주지를 않느냐, 비근한 예로 이렇습니다.

농협과 수협에 공적자금 투자하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이 농민들한테 돈을 빌려주어가지고 부실채권된 것이 아니라 대우채라든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부실난 것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농민들 것은 왜 안 해주는 것입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부 경제각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영세민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 영세민하고 농민들하고 어디 비교가 됩니까? 또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IMF 3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약 4조8,952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도시 영세민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농촌에 투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5조가 되는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3분의 1, 단 1·2조라도 농촌에 투자했다면 현재 농촌이 이렇게까지 파산지경에 와 있지 않다, 그러면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을 이야기한다면 농촌에도 지금 5조 투자하세요. 공공근로사업, 농민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에 농민기에 투자해가지고 농촌 일손 다 없게 하지 않았습니까? IMF 일어난 지난 3년 동안 농촌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차원에서 보든지, 도시 영세민하고의 형평성에서 보든지,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잘못으로 일어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책임자들이 한 분도 맞다,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총리도 이야기 안 해, 재정부장관도 이야기 안 해, 기획예산처장관도 이야기 안 해, 그러면 농민들 다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로 농사 못하겠다, 농사 지으면 짓는 그 순간부터 빚을 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에서 쌀도 배추도 소도 돼지도 싸니까 사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농가 부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정말 빚 갚을 여력이 없다, 농사지어도 빚만 지니까 농촌은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농민들 절규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총리께서는 나오실 때 3년 전 대선 공약 굳이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1989년도 농가부채경감특별법 그 내용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당시에 현재 金大中 대통령께서 평민당 총재로 계셨을 때 야당에서 주장해서 여당에서 받아들였던 그 법안내용을 보면 과격적입니다. 0.7ha 이하는 모든 이자 감면, 2.0ha 이하까지는 이자 5% 거치분할 상황, 이래서 엄청나게 그당시에 농가가 부채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현재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시는데 왜 농가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 무관심 정도를 넘습니다. 아예 막 죽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고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정말로 농가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가가지고 이 나라 정부 대통령께서 우리는 농촌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이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그 날짜로부터 모든 농민들이 보따리 싸들고 도시로 도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도시로 와야 될 것입니다. 왜 농촌에서 농사지으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빚지게 하고 교육을 못시키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으로서 농어업은 수익률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12% 상호금융 이자를 갚아라, 그것은 빚지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나라의, 농사를 해가지고 돈이 된다는 미국이나 영국도 농가 소득보조의 약 40%에서 50%는 전부 다 정부예산으로 소득보조를 해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EU도 그렇습니다.

농사한다는 자체가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떨어지면, 그리고 농사는 누가 해도 해야 할 것이라면 정부에서 그만큼 책임을 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농업에 대해서 아무런 방향도 없고 인식도 없고 정책도 없고 지원도 없고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농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은 정말 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재정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총리 세 분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경부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도 환율에 대한 예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달러당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1년도 환율에 대한 예측을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지금 환율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당국에서 내년에 얼마로 예측을 한다 하는 것은 환율의 성격상 당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權五乙委員** 현재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

기 위해서 환율전문가라든가 경제연구소라든가 무역협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재 내년도 환율을 추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현재 넘어선 1,200달러는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환율이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01년도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관세수입이라든가 수입에 대한 부가세 수입의 세입이 과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1,200원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수입이 늘어나고 세입이 늘어나고 수입에 대한 부가세가 늘어나면 세계잉여금으로 잡아주고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체로 계산을 해보니까 관세부분에 2001년 관세율은 환율을 1,100원으로 했을 때 6조7,320억원인데 이것을 약 1,200원으로 하게 되면 7조3,440억원으로 한 6,1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산방법은 물론 예산당국에서 했듯이 2001년 수입전망이 1,800억불에 환율 1,200원 곱하기 해서 5년 중 3년 평균 실효세율을 3.40% 하면 현재 세입 잡은 것보다는 약 6,120억원이 더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수입분도 부가가치세 수입분을 약 1,100원에서 1,200원 하게 되면 1,100원 했을 때는 16조5,330억원 이지만 1,200원 하게 되면 약 18조3,600억원으로 증가분이 한 1조5,03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하게 됩니까, 아니면 추경때 다른 재원으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라는 우선 국가채무에 상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또 세출부문에 외화표시의 세출예산이 총 39억불 되는데 이것을 약 환율로 1,200원 하게 되면 1,170억원 정도 추가로 지출요인이 발생해서 세입세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1조900억원으로 세계잉여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물론 환율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 세계잉여가 예상이 된다면 지원이 없어 놓가 부채 해결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분에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정부의 의지문제이지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각 부처별로 별도로 질의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마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생산적 복지 해가지고 얼마나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복지예산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우리와 같은 이런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국가부채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생산적복지 해가지고 이 전적소득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팍홀려 열심히 일해야 할 이럴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름니다마는 나중에 부처별 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환율변동에 따라서 세입이 오히려 한 1조9,000억 증대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주고 부채 갚을 때 쓸 수 있고 또 예산 전체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세원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예산 당국과 재정경제부당국에게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기획예산처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203특수활동비가 약 100억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203특수활동비를 법적인 근거를 해보니까 국회법 제84조4항, 국가정보원 예산 및 국정원의 기획조정대상의 업무와 관련예산은 예산산출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동법 제12조 국정원 예산은 비공개로 하고 또 알게 되었어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나 법이나 규정에 보아도 청와대의 203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적인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하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각 부처의 203목의 경비는 법적근거 없이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權五乙委員**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편성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조정업무 범위에도 통일부, 외통부, 행자부, 법무부, 국방부, 문광부, 정통부, 해수부, 과기부, 공보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청와대의 203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경우에는 총액계상비의 원칙…….

○**權五乙委員** 총액계상주의 원칙인데 총액계상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청와대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예산도 98년은 99억, 99년은 99억, 2000년 104억, 2001년 104억, 금액이 똑같아요. 물론 총액으로 계상하니까 똑같은 수도 있지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국정원 경우에는 총액으로…….

○**權五乙委員** 총액으로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총액으로 계상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權五乙委員** 이것도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씁니까?

그리고 감사원 여기 나와 계시지요?

왜 감사원은 이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監査院事務總長 李秀一**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비로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權五乙委員** 총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감사를 안 해도 되지만 청와대는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다 찾아보세요. 국회법이든, 국정원법이든, 규정이든, 대통령령이든 다 찾아보세요. 찾아봐도 청와대에 203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은 대통령께서 그냥 씹지 돈으로 쓰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청와대의 203 특수활동비 104억을 편성해 놓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98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국공채발행이자 문제를 가지고 그때 예산을 조금 조정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국공채라든가 공적자금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이차지출로 들어가는 것이

재정규모의 9.4% 약 9조4,938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는 약 9.5%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본 위원이 99년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적자금 국채의 이자비용액이 1조5,663억원 불용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자율 9.5%를 현재 시중의 3년 만기 국공채가 30일 평균 7.0%, 국민주택 1층채권 이자율 30일 평균 7.4%입니다. 그러면 한 8% 좀 여유를 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공채 공적자금 이자는 커버가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약 7,300억 순 삭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왜 9.5%로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자료로 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현재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보니까 상임위에서 약 35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자금을 지원했습니까?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인데 여기 1,000억에 달하는 식량 50만t을 지원 결정하여 그렇게 한 것 맞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지금 장관님이 국무회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국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

○**權五乙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남북 2차 가족상봉에 있어서 남북어부 갑판장이 가족하고 만났는데 이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까? 앞으로 국군포로라든가 남북어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인가……. 정부의 방침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정부는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權五乙委員** 그러면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 등 생사확인 다 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계속 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다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만 그렇게 만나게 했을 때 물론 그 부모라든가 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군포로 어떻게 하고, 남북어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부방침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해 주시고, 정보통신부에서 국가정보통신망 7,000억 중복투자문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증액된 부분 지방자치단체 부채상환에 쓰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하고 포상성 지원예산 전액 삭감하는 문제, 지방의회 유급 예산 문제는 서면질의할테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權五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鄭宇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委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감사원장님과 재경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진천 음성 피산 출신 **鄭宇澤** 위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IMF 3년 이후의 경제정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늉만 낸 구조개혁으로 국민고통만 증대시킨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IMF 당사와 현재의 여건을 한번 비교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외환보유고가 900억 불을 넘는 점 이 점 이외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IMF 위기극복의 일등공신이었던 건전재정도 이제는 적자투성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경기도 호황에서 하강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동남아 통화불안 또 국내경기의 하강 및 신용경색현상 등을 들어 또다른 IMF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IMF 위기가 오면 건전재정의 대응수단도 또 그 당시에 원자재가격 하락이라든지 미국경기 호황이라든지 이러한 도와줄 대외여건도 없이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패한 이유가 저는 네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금년 총선을 인식해서 현 정부여당이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문제, 현대문제 등을 작년 8월 이후 충분히 인지하고도 처리가 지연되는가 하면 정부의 IMF 조기졸업 강조라는 이러한 허울 좋은 말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난국 해소의 의지만 약화시켰

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문제 치중으로 경제에 대한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을 꼽습니다. 장·차관에 대한 전적인 책임부여도 없이 경제에 대한 제3자적 위치를 고수한 대통령도 저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서는 현대의 문제도 남북문제에서 출발했고 남북관계의 집착으로 현대 처리가 미온적이 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우자동차 포드와의 협상이 깨진 후 한 달 내에 매각을 하겠다는 발언 등 말이 앞선 정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재벌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빅딜의 경우에도 석유화학부문 또 자동차분야 등 이미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구시대적 구조조정 정책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유에 대한 본 위원의 거론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합니다. 최근의 노사문제, 공적자금 투입문제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실패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남북 경협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적자금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규모는 이미 투입된 109조원과 이번에 국회동의를 얻은 40조원이 합쳐져서 한 150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요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필요한 규모를 산출해 내고 회수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국민부담과 여론만을 의식해서 부실규모를 눈가림하면 우리 경제는 끊임없는 부실행진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정부가 이번에 요구한 40조원이 마지막인지 재경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린 부실금융기관 중 정상궤도에 오른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곳도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9조원의 투입 중 예금대지급 등 회수불능 27조원, 은행주식 등 평가손 18조원, 64조원에 대한 이자 28조원 등 지금까지 약 73조원의 국민순부담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40조원에 대한 이자 등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고 있는 국민순부담 규모의 최대치를 얼마로 보는지 재경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자금 사용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번 공적자금특별법상 위원회가 재경부에 설치되도록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이 옳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대로 재경부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11·3 기업퇴출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3일 287개 부실징후기업중 52개사의 퇴출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단을 앞세우고 정부가 사실상 조정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의 경우 토지공사가 서산농장을 위탁 매각하고 주택은행이 선수금을 주는 것은 정부의 관여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했건 간에 문제는 퇴출조치의 내용이 부풀리기에 치중하고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52개 퇴출기업중 10개를 제외하고는 이미 청산, 법정관리 등 퇴출절차를 밟았던 기업들입니다. 기아 인더스트리 등 청산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두 개가 있고 한라자원, 대한중석 등 이미 청산절차에 접어든 기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건설은 11월1일 법원에서 법정관리폐지결의까지 된 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합 등 부실규모가 증가하고 이자보상비율이 1배도 못 미치는 기업도 조건부회생을 시켜버렸습니다. 고합의 경우 울산2공장 등 우량물건을 팔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동주택의 경우에는 11월22일 화의취소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만큼 회생가능한 기업임에도 퇴출대상에 포함시켜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시켰습니다. 또 퇴출대상에 없던 SMK의 경우는 부도가 나버렸

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후 104개 기업의 1차 퇴출조치가 실패한 우를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정기준도 불투명하고 부실기업 및 관련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부과도 미흡한 우를 그대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별 부채, 영업이익, 금융이자, 이자보상비율, 자구노력이 행도 등 퇴출기업의 선정기준을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대상 부실징후 기업 또는 매각대상기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화가 되면 정부는 관련금융기관에 경영책임을 묻고 강제합병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실화가 됐을 때 누구에게 어디까지의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도 공허한 소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대건설은 1조2,9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물론 차인플레밍 등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주영 명예회장 출자전환 1,700억원, 현대차 주식매각 900억원, 정몽헌씨 사채출연 400억원, 서산농장 매각선수금 2,100억원 등 5,1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계동사옥 매각 등 잔여분은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 경상이익률이 마이너스 2.2%인 상태에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영업이익을 각각 5,000억원, 6,000억원씩으로 추정한 것은 분명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5만호 현대건설 아파트의 매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이와 같은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연내 추가지원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의 처리과정의 문제점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당초에는 재벌에 대한 출자는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바꾸어서 부도처리후에 법정관리하겠다고. 세 번째로는 감

자후 출자전환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자력회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해서 너댓번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이제까지의 재정경제부장관의 명성에도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말을 바꾼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계열분리와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鄭周永 3부자를 퇴진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몽구, 몽헌, 몽준 형제를 만나 형제계열사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계열사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의 일설에는 현대건설의 개운치 못한 처리가 대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의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책임한 대우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차의 해외매각 실패는 협상능력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을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밝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9월 포드와의 결렬후 10월20일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무식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각시한인 10월20일이 지난 후 지금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 정부는 과연 대우차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말 한마디 언급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GM이 대우차 전체를 살 의향이 없다는 것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부는 노조만 속죄양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는 전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정말 노조가 유일한 걸림돌이고 노조동의만이 대우차 매각의 선결조건이라면 10월20일까지 매각하겠다고 호언했던 금감위원장이나 또는 경제를 총괄하고 노조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재경부장관이 적극 노조설득에 나서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정몽헌, 정몽구씨는 만나면서 왜 노조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현준, 진승현 사고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통합감독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한데 데에 따라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감독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적어도 사오개월 전에 MCI 코리아라든지 진승현의 실체파악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9년9월 또 금년 3월 두 번에 걸쳐 열린금고의 불법대출을 이미 적발했습니다.

또 리젠트증권의 주가조작은 7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스증권의 외자유치 추진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6월에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건건이 처리만 했지 부서간 정보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간 정보교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의 문제금융기관만 클릭하면 관련업체의 동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금융사고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운영문제와 IMT-2000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별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한나라당 강원도 영월·평창 출신 金龍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총리나 장관님께서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일문일답 식으로 일부는 사후 답변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에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개혁은 정권 초기에야 가능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철저한 공공부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공공부문 개혁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폐합하여 직접 관장하며 시어머니 노릇 하는 정도라면 본 위원이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입니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개발공사의 통폐합 같은 굵

직한 개혁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듯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부문 개혁은 이미 시기를 놓쳐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 없이는 노조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인 지금도 공공부문 개혁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언제 민간부문 개혁할 것입니까? 개혁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개혁의 총체적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혁에 관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총리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월댐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4·13선거가 한참이던 때 여당에서는 표를 의식하였는지 댐건설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후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 대통령이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마지못하여 댐건설을 백지화한 후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2001년 예산안에는 수몰예정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은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군에 2만2,740km²로서 피해가구만도 517세대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91년 계획발표 이후 10년 동안 농기계지원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지원이 중단되었고 농촌도로, 마을 안길 포장사업, 농가주택 개·보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오지·낙후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제외되어 현재 지역의 낙후성과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급기야 11월7일 300여 주민들이 상경하여 농가부채에 대한 지원과 10년간 지원하지 않은 생산기반시설 등 영농지원 시책사업의 집중투자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월24일 총리지시 27호로 모든 부처에 영월댐 후속대책을 시달하면서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유의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떻겠습니까? 부처 내부에서는 업무소관을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고 특히 건교부의 경우 며칠 전인 11월24일에야 겨우 댐건설 예정지를 해제하고 건교부는 할 일 다 했다고 뒷집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강원도와 농림부만 동분서주하며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의 대책지시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총리실의 대책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관계부처에서는 대책마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법 4조에 의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부가 가능하므로 사업부처를 지정하여 예산을 책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증액교부금은 행정자치부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이와 같은 지원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라고 지시하면 건교부에서는 쉽게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불가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피해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증액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3년 내지 5년차 사업으로 총 306억원의 증액교부금 지원을 요청하고 우선 2001년도에 79억 배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자부 장관은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본 문제를 총괄할 주무부처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무부처로는 댐건설을 주도한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IMF 사태를 맞아 11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습

니다. 장관은 110조 중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회수하지 못한 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회수하지 못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40조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회동의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110조를 투입할 때는 국민들과 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일언반구 상의없이 집행하였는데 그때는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생산 부분인 농어촌부분은 전체예산의 전년대비 불과 0.98% 늘어난 9조3,193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펴보면 전년규모에도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99년1월 현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농업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유지되는 정책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부채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의 소신과 대책도 종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환경보전문제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주무부서의 장인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포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새만금사업 반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그 조치를 위한 예산집행실적이 있는지, 또 2001년도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동강은 댐건설 백지화로 훼손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향후 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영월 동강 보전을 위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강을 어떻게 보전할 생각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규에 의하면 페드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자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페드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해석에 따라 3만여 페드럼운반수집사업자들이 잘못 하면 모두 형사처벌 받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에 민원이 제기되어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법률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관련조문을 해석한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번 이산가족 상봉 방문과정에서 나타난 북측 사람들의 소행, 張忠植 총재에 대한 발언, 수시로 트집잡아 일정과 절차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 정치선전행위, 조선일보기자 감금행위, 일방적인 일정변경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여러차례 돌출하였는데 북한 金正日 체제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 정권출범 후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장관은 이 시점에서 교원정년 단축이 우리 교육계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계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교통통신 발달로 지역의 일부 열악한 조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교육부 의도대로 법규가 개정되면 백두대간이 위치하는 강원도의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등 13개 시·군의 38개 학교가 특수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백두대간 산간오지로서 문화생활에서 뒤떨어지고 경제생활이 취약하여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이전하는 현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중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고 교과서 무상공급 등으로 학비부담을 덜어 그나마 삶의 터전을 지켜왔는데 만일 벽지에서 제외된다면 그러한 혜택이 전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근무기피 현상이 급증할 것이고 결국 학교는 폐교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통신·교통수단 발달로 이 지역의 열악한 조건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것은 인위적 현상만 감안한 것이고 더 중요한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에 따르는 변화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산악지역 학교의 어려운 여건과 학부모,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주민들이 안정된 자녀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남해안관광벨트의 개발계획 중 목포, 완도 등 역사문화관광권 개발계획에 張保阜 관련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하면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1,49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산하 문화재청에서는 장도 청해진 유적정비 명목으로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20억원 이상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장보고 관련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162

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추진 중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현정부가 장보고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전라남도 남부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지역특혜성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부서의 사업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고 조정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련사업들의 추진을 중단하여야 하고 예산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땅히 사업폐지 또는 삭감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전국 농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협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검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은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宋永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委員 민주당 인천 계양출신 宋永吉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탄생배경 그리고 핵심적인 성과로 드는 것이 경제구조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성과가 지금에는 상당히 빛이 바래고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제구조의 개혁의 문제는 이번의 IMF 사태가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단순히 유동성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외환보유고가 37억불에서 937억불로 늘었다고 그래서 IMF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1년 반만에 IMF를 조기극복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너무 그것을, 철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주체들에게 현 실태의 어려움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앓는가 생각이 듭니다. IMF의 원인이 사실 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집권세력의 잘못된 판단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30년 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포되어 있던 부실규모가 이제 총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부실한 것이 드러난 그러한 상황이었습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태를 알려주고 경제주체들한테 이 사태의 현상을 같이 돌파하자는 호소와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아직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다,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4대 부문의 개혁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다시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인식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칙적으로 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업문제라는 것도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비용으로써 경쟁대상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투자진입장벽이라든지 정부의 보조로 인해서 망해야 될 기업이 억지로 버티면서 실업을 방지하고 있는 이러한 잠재실업이 부즈앨런 보고서에 의하면 약 9%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 노사부문 해서 4대 개혁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분명하게, 다시는 또 이것을 다른 정치적 논리에 따라 몇 개월만에 해결하겠다, 내년 2월까지 처리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국민들한테 부족한 점을 호소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몇 개월 안에 끝내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다면 장관들께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재경부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의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

는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 화해 등은 너무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현재에 있어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대북정책의 저자세라든지 또 투명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투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 자체가 이중적인 존재이고 상당히 예측불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뭔가 남북관계의 진전의 성과를 정부가 아주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점하거나 또 정보를 야당과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이 극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통일부장관께서는 뭔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보다 자신 있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해 가고 대강의,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은 야당한테 비공개로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합의를 구해서 앞으로 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우리 내부의 분란과 논쟁의 소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문제가……. 단순히 이번 예산안도 쪽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백화점 식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경제의 분업질서 속에서 생존할 것인가 중대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후발개도국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중국이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투자자본이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투자장벽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동남아로, 서남아로 전부 이동이 되어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서남아의 그런 동남아의 노동력과 결합되어서 한국보다 20 내지 30% 더 싼 코스트를 가지고 전자제품들, 컴퓨터를 다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속하게 공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못 따라잡니다. 가격경쟁으로는 동남아나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고 기술로는 일본을 뚫지 못하는, 중간에 부즈앨런 보고서의 표현에 따

르면 너츠크래커 같은 어떤 호두껍이에 끼어 있는 땅콩과 같은 그러한 아주 애매하고 과도적이고 불안정한 위치가 바로 저희 한국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한국경제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일시적으로 채권·채무관계나 유동성이나 재정균형, 적자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IMF를 극복하면서 계속 금융감독위원회, 재정부장관, 무슨 S&P, 무슨 유동성 이러한 금융 이야기만 되었지 산업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조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가 있으면 금방 유동성문제 해결됩니다. 바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듯이, 집안이 어려울수록 똑똑한 자식한테 투자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듯이 과학기술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이 명확한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융 구조조정, BIS비율 맞추어 가지고 은행 등 금융권에 지금 200조가 넘는 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중계기능이 발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 돈을 관리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정통한 이해가 없고 어떠한 산업에 투자해야 될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학…….

지금 대우자동차문제도 도대체 이것을 GM에다가 팔아야 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생존이 될 것인지,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 속에서 대우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살아날 전망이 있는 것인지?

대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도 사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기술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삼년 안에 대우와 같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산자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IT산업이나 정보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옳은 방향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보산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오프라인의 실질적 경제와 유리된 그냥 사이버공간에 있어서의 인터넷기업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전통산업이 지식집약적 산업과 창조적으로 결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의 탈출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라는 것은 기계산업의 총아로서 지금 전자제품의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원가의 총 구성비의 75% 내지 80%가 부품인데 그중의 80%가 전자제품과 플라스틱제품과 철강제품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철강과 플라스틱과 전자제품이 짝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자동차를 만들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품에 있어서의 경쟁력과 또한 동북아의, 앞으로 중국이 2010년 이내에 약 1억대의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또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있는 세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 한국은 자동차 생산 전진기지로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맨 땅에서 일구어 놓은 이 자동차산업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산업 간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계산업의 총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반드시 생존시켜서 세계메이저 5대 안에 우리 한국이 당당히 끼여들어 가지고 살아…….

자동차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터넷도 결합되고 전자장비, 컴퓨터……. 자동차의 컨셉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기부장관과 산자부장관, 분명한 자동차산업의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기부장관께서 보면 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 건수가 선진국들은 33건 내지 39건인데 우리나라는 16.3건이고 논문발표도 대만이 4.1건이고 싱가포르가 7.4건인데 2.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지식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내지 16%가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8.2%입니다.

특히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지요. 과기부장관과 산자부장관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과의 차이를 어떻게 개념과약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테크놀로지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이 너무나 취약하다고 봅니다. 바로 새로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단히 뛰어난 머리로 발견된 창조적인 기술이 엔지니어링이 있어 바로 상품화되고 양산체제로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자금……. 그러한 기술의 성과와 미래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계기능에 의해서 금융이 바로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창조적 기술이 바로 자본과 연결이 되어서 바로 생산화되고 바로 산업을 선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업의 신진대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돈 안 버는 기업은 망하고 잘 버는 기업이 생존하려면 이러한 중계기능이, 새로운 세포가 지금 생성되었는데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신진대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보니까 기술담보대출이 지금까지 97년도에는 211억이었고 98년 71억, 99년 12억, 2000년6월 현재 1억8,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 중계기능이 맨 부동산 담보 잡아가지고 안이하게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폭발적 잠재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다 이것이지요. 과학기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실제로 양산체제와 상품화로 엔지니어가 되어서…….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구만을 위한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 생산성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산자부와 과기부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금융감독위원회와도 연결되어서 창조적인 기술, 엔지니어를 통한 상품화, 그것이 금융의 중계기능의 뒷받침 이 3자의 삼박자가 만들어져야만 경제의 신진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과기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장관님 이 3자의 긴밀한 상호분업 연관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장관님들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호신용금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뒤늦게 금융감독위원장님이 출자자한테 10%

이상 대출한다든지, 자본금의 100% 이상을 대출하면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상호신용금고과가 있지요?

이것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李起浩 경제수석이 제2, 제3의 열린금고 같은 사건을 예상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신용금고뿐만 아니라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 대중들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서민금융기관들이 제가 보기에 위태 위태합니다. 마치 미국의 주택대부조합사건처럼 이것까지 터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핵심은 특수부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야당에서 지적한 대로 열린금고라든지 동방금고에 있어서 왜 유조웅 사장의 출국금지를 못하고 다 놓쳐버렸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나중엔 정현준의 진술을 듣고 나서야 그 사람이 관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이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라는 것은 특수부를 통해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정보축적을 통해서 미리 기획수사를 해야만 특수부의 의미가 있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 고발이니 이런 것들을 해올 때 수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이미 증거인멸이 되어 버리고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살아나는 길은 특수부활동을 강화해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가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중대사범에 대한 사전인지작업이 철저히 준비되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는구나, 잘 한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밝혀 준 것도 못 밝히는 이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켰던 심재륜 검사나 대통령의 동생을 구속시켰던 강원일 검사처럼 평검사들한테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특수부 검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는 그러한 검찰 내부의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새만금사업이나 제반 사회복지사업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별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權琪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울산 출신 한나라당 權琪述 위원입니다.

국무위원과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순계규모는 135조5,951억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비해서 6.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후 99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5년 평균 징수결정액은 예산의 109.2%였고, 수납액은 세입예산의 101%가 훨씬 넘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은 예산의 109.7%입니다. 많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액이 예산액보다도 초과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의 101% 이상이 초과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평균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의 수납액은 예산의 101%를 훨씬 초과할 전망입니다. 재정부장관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12월 초에 내년도의 경상성장률을 8 내지 9%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 증가율은 2.3% 여유 있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성장률 추계에 큰 하자가 없다면 최소한 2조1,000억원 이상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전망을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14.7%인 11조7,000억원씩이나 대폭 늘어날 전망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10%가 2001년도 직접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예산을 최소한 2조1,000억원 이상 증액해서 국제발행규모를 9,000억원 이하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재정의 조기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재정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항만개발투자가 몹시 저조합니다.

일본은 GNP의 0.43%를 항만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GNP의 0.28%를 항만에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하는 0.14%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간 1억1,000만t의 해상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인천항의 체선율은 1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해상화물의 20%인 연간 1억5,112만t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울산항의 체선율도 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적체로 인한 물류비의 증가로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항만적체로 3,3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제4위의 컨테이너 화물처리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부산항의 시설능력은 세계 20대 항만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항만서비스의 저하로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기지 선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전국의 항만사업비는 9,965억원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1조1,799억원보다도 16%가 감액되었습니다.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의 권역별 항만건설예산은 3,379억원으로서 올해 3,777억원보다도 오히려 10.5%가 감액되었습니다. 신항만건설예산 또한 3,739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78억원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했던 4,289억원에 비해서는 550억원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국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정책목표와는 달리 항만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목포항 등 특정지역 항만에 편중계상해서 투자효율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만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축소 삭감해서 항만투자예산을 확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경부고속철도 국고지원금

8,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공단 자체조달금을 포함한 내년도 총사업비는 2조696억원으로서 올해보다도 229억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비라고 서울-대전-대구 구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조4,358억원이 소요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12km를 1시간56분에 주파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출범한 뒤에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대구 이남 경주-울산-부산구간에 대한 사업비 1,310억원을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구 이남 구간의 사업은 2004년도까지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대전-대구구간까지만 고속철도를 건설을 하고 대구-부산구간은 기존선을 개량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경부선철도 대구-부산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여객과 화물소송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40분이 소요되게 됩니다. 평균 시속이 153.7km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새마을호도 선로를 조금만 개량하면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부고속철도가 시속 300k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 13조를 투자해서 평균 시속 153km인 경-구,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철도를 건설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대구-경주-울산-부산 구간을 1시간56분에 주파할 수 있는 경부고속철도를 차질없이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구 이남 구간의 건설을 2004년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반면에 약 11조8,000억원이 소요될 호남고속철도를 신규로 착공해서 2004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3,250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서 대전-목포간 호남선 전철화사업도 착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55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편익 대비 실적이 1.1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예산처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된 순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에 5,466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0억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3,020억원이 소요되는 순천-광양간 철도 복선화

사업예산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영남 지역 대구 이남 구간의 건설을 2004년까지 중단시키고 반대로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사업을 신규로 착공시켜서 2004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동서화합을 깨뜨리고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처사입니다. 이렇고도 편중예산이 아니고 영남 푸대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사업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 구간의 건설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04년까지 중단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영남 푸대접, 호남 특혜라는 불행한 단어들을 추방시키고 동서의 참된 화합을 위해서도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 영남구간에 대한 사업예산은 중단없이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와 IMF 위기를 맞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완전개방과 2004년도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날로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농촌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빚더미만 늘어가고 있는 고통을 참다 못해 고속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순박한 농민들의 피나는 심정을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알고나 계십니까?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땀 흘려 생산한 사과와 무를 정부를 향해서 던져야 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이 정부는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농정의 실패로 빚쟁이가 된 성실한 농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농가부채탕감을 약속했던 이 정부는 500만 농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논농사 직불제 또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2001년도 예산에 2,105억원의 논농업 직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농업예산의 20%를 직불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9%를 직불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ha당 겨우 20만원 내지 2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WTO협정에 따라서 해마다 미국수매보조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ha당 50만원 수준은 지급해야만 직불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ha 이상 농가에도 직불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계화, 규모화를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6,000평 이상 농가에게는 직불제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입니다. 상한제로 절감되는 재정은 극히 적지만 부작용은 대단히 큼니다. 지급상한선 설정은 꾸준히 추진해 온 농업구조개선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불제 상한을 철폐하고 ha당 논농업 직불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부채탕감대책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재정부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묻습니다.

건설산업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GDP의 20%에 달하는 유효수요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외화획득과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을뿐 아니라 200만명을 고용했던 국가 기간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투자 규모가 GDP 대비 16%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실업자의 절반인 40만명 이상의 고용감소가 건설부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지하철로 모여들고 있는 노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처리된 29개 퇴출업체 중 11개 업체가 건설업체입니다. 대상업체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300여개의 하도급업체와 2,000개가 넘는 자재납품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시작되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예비실업자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들이 IMF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건설산업만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대 건설업체 중 40개에 가까운 대형 건설업체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1년도 예산안에 SOC투자예산은 동결되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SOC투자예산을 동결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잘못 파악해서입니

까? 아니면 대통령이 시정방향을 국민에게 거짓으로 듣기 좋게 제시한 것입니까?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은 완공위주로 투자효율을 높이면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등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의 강화로는 SOC사업이 확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B/C와 경제성 및 투자효율성 분석은 2001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휴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은 완공위주로 SOC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SOC투자공백을 초래할 것이며 미래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SOC투자 중단으로 인한 미래의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집권하는 동안만 부담 없이 넘기려는 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완공되는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은 추수기가 다 된 농사만 추수하고 앞으로의 농사는 시작하지 않겠다는 하루살이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1년도 주요완공사업은 10개 사업, 11조4,035억 원입니다. 그러나 주요 신규사업은 6건, 5조4,443억 원에 불과합니다. 세계은행에서는 GDP의 5% 정도를 SOC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GDP의 2.9%를 투자했으며 올해에도 GDP의 2.7%를, 내년도 예산에는 2.6%를 투자하는 등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75조원의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해마다 15%씩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DP대비 물류비의 비율이 16.5%로서 일본의 9.5%, 미국의 10.5%에 비해서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도 SOC 투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이 그동안 쌓아왔던 국제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왔던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영원히 퇴출되는 불행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도 SOC투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가장 큰 건설산업을 되살려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SOC투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생산적인 성과도 없이 쓰레기나 좁고 어슬렁거리다가 일당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의타심과 나태심을 조장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생산적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값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SOC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회간접시설 투자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숙자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는 근본치유책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하지 못한 부처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관들께서는 시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밑에서 써준 것 그대로 읽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소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 權五乙 위원님, 鄭宇澤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宋永吉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宇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북측이 정치선전, 조선일보기자 억류, 張忠植 총재 방일에 대한 발언 등을 하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측의 이러한 일련의 부정적인 태도는 나름대로 북측 체제에 대한 자존심 유지와 대내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나 그 동기가 어떠한 이산가족 교류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남북대화 등 각종 대북 접촉기회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學委員 잠깐만요, 장관께서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저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 세 가지로 판단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정부라든가 기자, 언론 또는 우리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북한 세습 통치체제하고 북한 현실의 열악한 점을 최대한 감추기 위한 사전 단속행위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 정부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 체제의 허약함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이산가족 상봉, 이것을 앞으로 단절하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측 대응행위를 유도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각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첫 번째 의도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항의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라면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역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라면 그 사람들 의도에 빠지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바랐던 것은 좀 세밀하게 나누어서 답변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宋永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宋永吉 위원님도 나중에 답변하세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혹시 나중에 위원들이 오셔서 답변을 요구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龍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서는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검사가 판사와 달라서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에는 탄핵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외에 '기타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이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탄핵제도의 본질상 검사는 법관과 달리 징계 절차로도 면직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한 탄핵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법률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법계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도 법관과 달리 검사는 탄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사는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龍學委員** 장관님, 잠깐만요. 헌법 65조를 해석하시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 가지고서 이 부분을 단행탄핵에 관련된 단행법률로 생각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기타 법률」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개개 단행법률에 탄핵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공무원도 당연히 탄핵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우리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金龍學委員**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찰청법 37조에 의하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가지고 검사는 탄핵결정, 자유형 선고 확정, 징계처분, 이 세 가지에 의해서만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렇습니다.

○**金龍學委員**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탄핵대상이 아니라면 왜 탄핵결정을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유로 검찰청법 37조에서 들었겠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관에게는 징계면직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에게도 면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탄핵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분조항의 보장조항적 규정이지 이것이 정면으로 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金龍學委員** 아니,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말은 헌법적 차원에서의 용어인데 이것을 다른 법률에 사용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예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축소해석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타당한 해석이겠어요?

또 한 가지 들겠습니다.

법원조직법 46조를 보면 「법관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37조하고 똑같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거기에는 면직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징계에 의한 면직조항이 없습니다.

○**金龍學委員**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똑같이 두 개 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우리 검찰청법에는 분명히 면직이 되지 않는다고,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에게는 징계에 의

해서 면직조항이 없습니다.

○**金龍學委員** 무슨 소리예요? 검찰청법 3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金龍學委員** 그것에 의해서 「파면,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역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신분보장에 관한 것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조항인데, 내용을 읽어보아도 똑같은데 법관은 탄핵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검찰청법 37조에 의해서 검사는 대상이 아니 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해석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찰청이나 검사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왜 여기서는 법관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조항도 똑같고 헌법도 그렇고 검찰청법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조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법관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률’이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법률’이라고 하려면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해서 검사에게 신분을 보장하는데 만약에 탄핵에 의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조항이라고 해석되고 그렇기 때문에…….

○**金龍學委員** 장관님, 아까 그렇게 해석하셨는데요 그것이 아주 극소수 장관님이나 검사들의, 요번에 등장한 검사들의 극소수 해석이라는 것을 아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저도 헌법 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전부를 읽어보면 탄핵소추법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외교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고위 공무원이 여기에 예견된다 이렇게 하는 학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정면으로 검사는 탄핵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이 기본모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거기에 해당되면 그 중에 검사도 거기에 예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金龍學委員** 장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입니다, 헌법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헌법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헌법위원회위원,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장관처럼 탄핵소추대상을 정한 특별한 법을 예정하고 정한 헌법규정이란 앞에 예시할 필요가 없어요. 기타 법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현행법 중에서도 탄핵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면 그 당해 공무원도 탄핵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청법이에요. 다른 법률은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청법에만 검사에 관해서 탄핵결정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위원님의 견해도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그 조항은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항입니다.

헌법에서도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이러한 처분, 파면이라든지 정직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그 헌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회대사전도 찾아보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열거한 대상자 외에는 고급공무원은 탄핵대상자를 규정한 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왔고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도 “앞으로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을 경우 검사도 탄핵대상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은 그럼 무엇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金龍學委員** 거기에 탄핵이 왜 나오느냐 말입니다. 헌법대상이 아니라면…….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탄핵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헌법교과서에다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金龍學委員** 검찰청법 37조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검사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데 탄핵을 받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예시적 규정 세 가지를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金龍學委員** 아니지요. 예시적 규정이 아니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신분을 보장하는데, 검사도 신분을 보장하는데 징계라든지 형벌이라든지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金龍學委員** 그렇지요. 그럼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까 말씀…….

○**金龍學委員** 탄핵에 관한 절차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이라는 기본법이 나와야 되지요.

○**金龍學委員**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탄핵절차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에 관한 기본절차를 밝아야 된다고요. 그런 법이 나왔을 때…….

○**金龍學委員** 그런 법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없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金龍學委員** 장관 말대로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도 탄핵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金文洙委員** 궤변이지요 궤변…….

○**法務部長官 金正吉** 궤변이 아니라니까요. 궤변이 아니고 이런 것은 검사에 관한 신분보장에서 탄핵이나 형벌이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연, 정직 또는 감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金龍學委員** 법률규정을 가지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인하십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다른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모아서 하고 아까 말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실무

제요에도 이렇게 나왔고 국회 의회대사전에도 그런 것이 예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올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청법 37조는 탄핵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장관께서 해석한다면 법원조직법 46조가 탄핵대상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그러면 판사도 탄핵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된다는데 장관은 그런 해석은 또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또 묻겠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몰라도 법조인이라면 마땅히 헌법과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는 탄핵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검찰청법 33조를 하나 들겠습니다.

검찰청법 33조에 보면 「검사임용 결격사유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탄핵결정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역시 검사가 탄핵소추대상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33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또 하나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정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에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金龍學委員**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견해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저의 견해를 여러 가지 문헌과 법리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龍學委員** 물론 장관님께서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법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라면,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해서 거듭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장관께서는 입장을 안 바꾸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이 있습니다.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정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요?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法務部長官 金正吉 대상여부는 불문하고 국회에서는 발의할 수 있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시니까…….

○金龍學委員 그렇지요?

탄핵사유인지의 여부는 국회에서…….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사유인지 여부는 저에게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석을 여러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金龍學委員 좋습니다.

장관께서 견해를 바꾸지 않으신다니 그것은 제3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국민들이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유여부에 관해서는…….

○法務部長官 金正吉 탄핵사유 여부보다도 탄핵 발의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시니까 그것은 발의할 수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결정과정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검사나…….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니, 결정과정이라는,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탄핵의 발의여부를 지금 저한테 물으셨지 않습니까?

○金龍學委員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제일 먼저 물으셨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金龍學委員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니, 그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런 질의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야 국회가 가지고 있으시면 그것은 권한행사니까 그 요건여부는 나중에 헌법재판소나 어디서나 판단하시더라도 탄핵은 국회에서 권한이 있으시니까 권한 있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金龍學委員 예, 맞습니다.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니,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金龍學委員 장관,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것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金龍學委員 장관 얘기하는 것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제 얘기 들으세요.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정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검사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이나 일부 검사가 왜 무엇이 겁나 가지고서 탄핵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밖에다 말을 흘리고 다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스스로 내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 주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는…….

○金龍學委員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전에 유태홍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실을 알고 있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알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때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탄핵이 발의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金龍學委員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왜 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법관인사를 불합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발의되었던 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사유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탄핵사유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말 안 했습니다. 법원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금의 검찰에서 하는 행위하고 그 당시 법원의 행위하고 한번 비교하면 차이가 커도 너무 큼니다. 장관께서는 검사가 탄핵대상이 아니라느니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 법조인 양심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어떻게 양심…….

○金龍學委員 저로서는 법조인답지 않는 법조인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감사합니다.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 장관은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억박 지르고 다른 데 다니면서 탄핵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론적인 얘기, 학문적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었으면 답변하면 그 답변을 기다려야

지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것만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질의·답변입니까?

○**金龍學委員** 金 위원님, 말씀을 참견하시는데 제가 물은 것에 답변하셨습니다.

○**金聖順委員**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위원께서는 장관 답변 듣고 케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케변입니까? 답변이 지금 진행 중인데…….

○**金龍學委員** 케변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답변에 왜 나서서 그러십니까?

○**金聖順委員** 동료위원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金龍學委員** 그것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金聖順委員** 장관 답변하는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해야지…….

○**申榮國委員** 지금 여당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대개 국회에 들어오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국회에 와서 몇 년 된 사람이 의사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에 들어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당분간은 좀 배울 때까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재선인 金文洙위원이 발언하는데 그런 정책질의를 왜 결산 때 하느냐고 한다든지, 잘 모르시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것 의사진행, 정책질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은 먼저 온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정책질의시간이고 위원이 장관한테 질의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너무 무리되면 그런, 또 국회에서 마땅치 않으면 질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어제 장관한테 이보다 더 심한 질책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당이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야당에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아까 들어 보니까 법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하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 검찰만 유독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하는 것은…….

이쪽의 우리 金龍學 위원도 다 법조인이고 다 충분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너무 정치적으로 자꾸 답변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검찰의 신뢰 얘기했을 적에도 금방 한 얘기하고 조금 있다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좀 언성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답변할 때 좀 진솔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聖順委員** 저는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회법 어디에 조선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못 합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야지 왜 못 합니까?

○**申榮國委員** 잘못된 것이 있어야 얘기하지.

○**金聖順委員** 잘못된 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조선이 좀 배우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배울 점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위원장님, 좀 답해 주세요. 국회법 어디에 있는지…….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金聖順委員**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다음 宋永吉 위원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신상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宋永吉 위원 답변하세요.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세요.

○**委員長 張在植** 하세요.

○**金文洙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법무부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다 인정하는 바이고 저희도 또 전해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을 당연히 대변도 하시고 방어도 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도가 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金龍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검사가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는 문제는 물을 필요도 없는 질의를 金龍學 위원이 구태여 질의한 이유가 며칠 전 장관께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검찰은 탄핵소추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항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니 저는 상당히 경악스럽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며칠 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려고 상정하려고 했던 것까지, 상정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의안으로 채택이 된 것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기억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알고 계시지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그때 검사가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 아니라고 법무부장관이 생각하는 일을 전 국회의원들이 다 했네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까 金龍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라든지 그때에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요지가 법무부장관 당신 생각에 검사가 탄핵소추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헌법 교과서라든지 학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해서 검찰청법에 있는 그 조항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법관과 이것은 다르다, 법관은 헌법에 명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탄핵대상이 되어 있는데 검찰청법에 규정하는 것은 검사는 형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탄핵에 의하지 않는다 그레 가지고 신분보장을 준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학자의 견해도 앞으로 이런 법률이 정해질 때는 외교관이라든지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해놓은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도 일부 학자는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 또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고 우리 법계와 같은 독일이나 일본도 검사는 탄핵조항에 넣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는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탄핵소추법이 제정되어서 그 중에 명백히 넣었을 경우에 그 때는 될 수……. 가능, 예견 가능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헌법재판소의 해석제요라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취지의 것이 아닙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장관님, 여기가 국회이고 국회가 바로 며칠 전에 검찰…….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답을 해드린 것 아니었습니까? 견해를 물으셔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이리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그런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견해가 국회에서 며칠 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우리 당 의원 전부 발의했고 또 여야 간에 합의되어서 표결하려고 상정까지 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전 국민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검찰청법 제33조에 이미 검사의 임용결격사유로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사유다 이렇게 검찰청법에 나와 있고 제37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징직 감봉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탄핵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검찰청법 33조, 37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장관님께서 더구나 국회에서 탄핵발의를 한 지 며칠 안된 그 장소에 오서 가지고 검사는 탄핵소추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개의 법률학자가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저는 또 모르겠어요. 또 일개 검사가 그런 말을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법무부장관께서 국회에 와서 본회의장 답변과 예결위원회 회의장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도 대체 국회를 모독하고 정면으로 국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니고 됩니까? 정말 경고를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법무부장관 같은 분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법률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검찰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니, 그것을 독단으로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의 얘기, 교과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실무제요, 국회에서 나오는 대사전을 모두 종합해서 그렇게 해석을 내린 것이지,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金文洙委員** 검찰청법 33조, 37조는 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것은 내가 아까도 누차 설명을 올렸습니다. 金龍學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조항은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적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金文洙委員** 어떻든 보십시오. 장관님, 이 자리가 국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래서 제가 존중하는 위원님께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金文洙委員**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

라 제가 이것을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런 해석이…….

○**金文洙委員** 장관님, 보세요. 그러시다면 이리이러한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견해가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그것도 목소리도 보통 목소리가 아니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하시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시고……. 이것은 국회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오만방자한 발언을 계속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견해와 같은 견해가 있다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짚어보셨으면……. 하여튼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金龍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맨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리이러한 얘기를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金龍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인데 만약 지금 현재 법무부장관이 계속 그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과연 올바르게 법무부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청법과 국회법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 견해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제가 국회에 도전할 이유가 뭐 있으며 도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이 됩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견해를 물었는데 종합해서 얘기를 한 것 가지고 국회에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文洙委員** 도전이지, 지금 며칠 전에 바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총장과 대검찰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해서 표결까지 하려고 했던 판에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 법무부장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지금, 대한민국 법이 뭐고 검찰청법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金景梓委員** 金文洙 위원, 장관, 잠깐 기다리세요.

방금 金文洙 위원의 발언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검찰이 탄핵소추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끝장을 다 내기에는 예결위의 갈 길이 너무 바깥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토론하기로 하고 다만 金文洙 위원의 발언 중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어떻게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金文洙 위원의 의견도 존중하고 검찰을 총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이 문제는 오늘 이만큼 토론을 하고 앞으로 계속 또 토론해서 안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자고요.

어떻습니까?

○**委員長 張在植** 여기서 끝내고 법무부장관 다음 답변하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다음 宋永吉 위원님께서 검찰 특별수사부 활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특별수사부 활동의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대형 경제사건 등 금융부조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력을 총 투입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좀 복잡하고 조사할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일부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다소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거나 세간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구성된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특별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검찰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 청에서 범죄정보관리 전담검사를 두고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별도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검찰 인 지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특별수사검사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각종 수사 참고서적들을 발간도 하고 배포도 해서 우수 사례들을 신속히 전국 검찰에 전파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는 등 전문 수사기법을 배양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금융이라든지 회계 분야라든지 각종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유념하여서 검찰이 활발한 특별수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 비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기에 수집을 하고 또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宋永吉委員 장관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방이나 열린금고와 같은 제2의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특수부 차원에서 정보수집 기능이나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터졌을 경우에 증거수집이나 범인 확보를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금융사고는 원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포착이 되면 언제든지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申榮國委員 장관님, 짧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법무장관께서 여기 답변하는 것은 첫째, 절대 우리 위원들보다 장관의 목소리가 높게 들리면 제3자가 볼 적에는 장관의 매너에 대해서 점수를 좋게 안 줍니다.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두 번째,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도 이미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안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합의해서 투표 날짜까지 다 합의를 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좀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나올 적에는 그런 신중치 못한 답변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金榮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宋永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립니다.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 과학기술부는 1992년부터 총 3,290억원을 투자해서 저공해, 안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을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회박엔진 개발, 에어백 개발, 전기자동차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환경과 자연에 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해서 대기오염 등을 강조시키고 선진국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 기능의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각종 승객의 편의, 승차감 제고 등 전자장치, 초 저연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차량 자동항법 운행시스템 개발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宋永吉 위원님께서서는 테크놀러지와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테크놀러지와 엔지니어링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테크놀러지란 하나의 지식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제품과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이나 기술 또는 경험같은 지식기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자본입니다. 엔지니어링이란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생산현장의 응용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지식집약적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 역시 정의는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는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기술의 실용화에 즉 상용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링의 육성을 함께 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宋永吉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기술의 개발과 상품화 그리고 금융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

술의 상품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제도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결과를 이전하기 위한 연구성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품화 그리고 기업화를 위해서 연구자금을 융자하고 기술담보를 대출하고 투자조합의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기술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를 통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기술평가기법 개발,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宋永吉委員 한 가지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우리나라가 외국기술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한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다만 거의 무역역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宋永吉委員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있는 데가 얼마쯤 됩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저희가 로열티 받는 것 중에는 정보통신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지불하는 돈보다는 아직도 버는 돈이 아주 적습니다.

○宋永吉委員 저는 그동안 과학기술부장관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순전히 정치싸움만 하고 언론도 이런 데만 많이 조명이 되지 진정으로 중요한 산업자원이나 과학기술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이나 언론이나 정치적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개탄스러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님이 상당히 지적인 분이고 논리적인 분이기에 때문에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로열티의 역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적소유권이 완벽하게 관철된 상황에서는 무역역조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宋永吉委員 자동차는 저희같은 후발국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5대 메이저 선진국들이 지금 환경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장벽과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뚫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거지요? 이 개발비가 3,290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투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는 전체의 한 20%밖에는 못하고 있고요. 저 자신이 틈 있을 적마다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宋永吉委員 기술하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상품화·양산화 체계로 연결하는 그 프로세스가 원활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그래서 최근에 한 단서로서 대덕단지를 산학연 협동단지화해서 조용하던 연구학원 도시를 이제는 활기에 넘치는 산학연, 벤처까지도 동원되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宋永吉委員 알겠습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金榮煥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기부와 산자부 간에 바이오산업 업무 중복과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연구의 결과물을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 의료, 농림, 수산, 환경, 에너지 분야 등까지 포괄합니다. 정부는 94년부터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기본계획 즉 바이오텍2000을 수립하고 그동안 관련부처가 역할분담을 해 왔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생명화학 관련 기초기술 및 유전체 등 첨단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산업공정 개발 및 생산기술 개발, 산업화 촉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중복과제의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金榮煥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리께 물으셨습니까마는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 투자 중복성과 종합 조정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서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과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사전 조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 일천하지만 계속해서 조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종합DB를 구축해서 각 부처의 연구기획관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사업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써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와 종사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 1,690여 개가 되며 종사자 수도 2만3,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통합전산관리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안전규제체제를 보강해서 주민과 시민단체와 공조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생활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신고 시에 방제체제를 마련하는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인력도 점차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榮煥委員 잠깐만요. 대체적인 토론을 하고 싶지만 질의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토의한 것 다 빼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정보, 전자통신 이런 것이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투자가 너무 중복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생명공학 분야도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제가 보니까 5대 주요기술 분야의 투자가, 부처를 중복적으로 계산했을 때 34개 부처가 중복되어 있고 1개의 프로젝트당 6.8개 부처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각 부처간에 투자가 중복되고 연계성이 부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기부도 이제 과기부만이 할 수 있고 과기부가 해야 되는 역할만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부처와 투자의 연계성을 살려 나가고, 독자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주된 투자

대상은, 과학기술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정보통신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면 산자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생명공학, 유전자에 관련된 투자는 아무래도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략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기술분야와 부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나누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각 부처마다 주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개발로부터 상품화에 이르는 과정에는 개념의 막연한 추상적인 단계로부터 실제 눈에 잡히는 상품의 개발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각 부처가 기능을 달리하지만 연계 중복되면서 하나의 연구개발의 주기가 끝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중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이름의 연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상, 그 시간의 흐름상 초기에 착수하는 부서가 맨 마지막에 상품화로 끝나는 부서하고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 하에서 일하는 사업도 중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金榮煥委員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다른 장관님들 답변하실 때도 똑같이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인데요. 묻지마식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 간에 이를테면 땅 따먹기식 비슷하게,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국가예산이 처음 기획 단계부터 부처 간에 조정과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같은 내용을 여러 부처가 매달려서 이를테면 인증제도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련되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기부는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의 독자성, 우리 과기부가 해야 되는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기초과학 투자는 과기부가 지원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아니면 안 되는 투자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공기술과 관련된 투자라든지, 유전자에 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어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마는 보건복지부가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생명복제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예.

○**金榮煥委員** 그래서 과기부는 생명복제라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인데 생명공학의 육성과 생명복제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사실 병존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기부장관이, 지금 중복투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는 보건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배아세포의 복제문제를 포함하는 생명복제문제에 관해서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조율할 것인지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徐廷旭**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마는 보건복지에 관련된 신문보도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관에 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중간에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고 또 과학기술부가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미리 각 부처에서 관련된 분야의 연구하신 결과나 조사연구 같은 것은 다 저희한테 종합되어 가지고 국가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도록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보건복지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다 취합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중복과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부별심의가 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 때로 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裴基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께서 게임산업에 있어서 문화관광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부처간 다툼과

중복투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게임산업 육성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의 부처간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99년2월에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 제·개정 시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게임산업 육성 업무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임을 확인했고 이를 행정·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부에 99년5월 게임음반과를 신설했습니다.

최근 일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협조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관계법령 및 부처 고유기능에 따라 게임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업무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청해진 장보고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중복투자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부산-목포에 이르는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거점과 부거점, 연계사업지구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정비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4대 권역 중 역사문화 관광권의 부거점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9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유적정비·복원, 기념관 건립, 야외선박전시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 중 민속촌 건립, 야외선박전시장, 장보고 호텔 등 사업에 총 1,3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은 노무라 연구소의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갖춘 사업을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부처간 협의와 특히 기획예산처와 실질적인 국가지원

규모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學委員** 이 사업 자체는 문화부에서는 1,496억원이고, 문화재청에도 20억원, 해양수산부에 3,162억원으로 합치면 거의 5,000여억원입니다. 어쨌든 앞에 나온 타이틀 이름은 장보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한테도 그런 호화스럽고 엄청난 국가 예산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5,000억원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액 사업선정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가 어렵고 또 한 눈에 보아도 중복투자와 과다한 투자 같아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사업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金龍學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해양수산부에 잡혀 있는 3,162억원은 2000년부터 2010까지의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과 기간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포함된 해양수산부 사업과 자체 사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를 포함한 장보고 사업으로 1,314억원이 해양수산부에 잡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學委員** 이게 문화관광부 예산과 해양수산부 예산과는 별도의 사업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별도입니다.

○**金龍學委員** 합치면 거의 5,000여억원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이라든가 사업을 축소하실 용의가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다음은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정부공약 사항인데 이관에 협조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는 97년12월 대선 당시에 여야가 공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98년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마사회 이관문제는 마사회 관장부처를 변경하는 데 따르는 실익이 없고 경마를 레저스포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과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경마수익금 중에 재투자분을 제외한 전액은 축산과 농어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농림부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추가로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는 말과 기수가 어우러지는 경주를 통해서 즐기는 여가체육활동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것이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92년도에 우리 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가체육활동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 국민 여가체육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여가 체육업무에 관한 관장부처의 일원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칫 사행성을 떨 위험성이 있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관장하기보다는 정책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광수요와 관광진흥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21세기에는 경마의 관광산업 자원화를 위해서도 스포츠·레저 진흥업무와 관광산업육성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관장하는 것이 업무의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龍學委員**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농민들이 지금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그렇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리고 또 경마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세계 각국이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명분이 무엇이나 하면 종마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부서에서 관장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선거 시에 마사회 이관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100대 사업에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金龍學委員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 마사회 이관에 관한 선거공약을 포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 공약을 잘못하신 것인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마수익금 중에 재투자분을 제외한 전액이 농민과 축산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라는 것을 축산산업으로 볼 것인가 레저스포츠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제가 물은 것은 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선거 때 공약을 하셨는데 100대 사업 선정 시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방금 장관께서 그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는 그 선거공약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선거공약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그레야지 우리 농민들도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놓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10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판단해 보니까 마사회의 관장부처를 변경하는 데 따르는 실익이 무엇인가, 또는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추가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 봤을 때 이미 경마수익금의 전부가 농민과 축산농가를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를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러면 공약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 공약을 안 하셨겠네요? 그런 결론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金龍學委員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까? 사실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안 하셨겠지요.

이만하겠습니다.

○金景梓委員 어제 제가 질의한 국회에서의 사진기자의 메모촬영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미루어 놓았는데 서면답변서 자체 사무실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오늘 중으로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金景梓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景梓委員 요새 이 문제와 관계해서 한국사진기자협회하고 제가 일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견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金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우리 부를 흔히 언론 주무부처라고 말합니다마는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가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 우리 부는 신문사 설립 기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등록허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내용 하나 하나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우리 부가 판단해야 할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오게 될 서면답변서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아예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나라 언론의 보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합니까? 방송위원회가 합니까, 신문협회가 합니까, 국정홍보처가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보도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주무부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景梓委員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각개약진으로 춘추전국시대처럼 막 번성하는 것입니까? 언론자유 천하군요. 아무리 자유언론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주무부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언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전라남도 광주를 예로 들자면 일간신문사가 10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이 나라 정부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디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춘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것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조직법상 예를 들면 신문의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편집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정부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나 또 각부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메모에 대해서 특정한 신문의 사진기자가 이것을 찍어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검토해본 결과 코멘트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언론자유 영역에 대한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어느 지점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있었던 일을 완전히 사생활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겠는지 등등 많은 의문점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 부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관이군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景梓委員 고맙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위원님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沈揆喆 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 벤처기업지원 등 정보통신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그리고 게임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

광부, 물류산업 분야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사업이 중복된다고 하시면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산업분야가 출현됨에 따라서 관련부처 간에 일부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의 합의조정 등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부처간의 사업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업체가 동일과제로 중복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과제관리기관을 연계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재원의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책기능에 있어서 중복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조정을 통해서 정책중복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權五乙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煥委員 장관님, 답변은 되셨고요. 하나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을 만들어서 인증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정통부에 아이셰이프라는 인증제도가 만들어져 있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예, 그렇습니다.

○金榮煥委員 산자부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쇼핑몰사이트 인증이 이트러스트 마크라는 인증제도가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지금…….

○金榮煥委員 이트러스트 마크 말씀입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지금 쇼핑몰 인증마크 제가 관련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금융 교육 쇼핑몰 등 인터넷사이트에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자거래진흥원에서 쇼핑몰에 한해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쇼핑몰에 한해서 표준약관 마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서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터넷사이 트에는 쇼핑몰 이외에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 대해서는, 시작이 부처간에 선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 대해서 중복이 있거나 약간의 표준기준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또 아니면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榮煥委員** 쇼핑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부와 산자부 중에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서 껄뽀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이다 이것이 쇼핑몰업체 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전자상거래나 또는 새로운 신산업에 있어서 인증문제를 포함해서 부처가 도대체 어디 소관부처인지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게임문제,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겠습니까라는 유무선게임대회 개최하는 문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의 관계부처가 모여서 타협하고 조정하고 역할을 규정하고 영역을 나누고 하는 일을 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중복도 막고 또 산업체에 일하는 사람들도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중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양 부처의 어떤 특정 기술분야의 기술연구비가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돈이 거기로 집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정보통신부에서도 산업자원부 산하 부품연구소에 또 거기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연구분야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의 중복이 있을 때마다 국무조정실이나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정보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사실은 영역이 산업사회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던 것이 융합되고 통합되고 이래서 혼선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잠깐만요.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님께서 초고속망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그리고 한국통신의 가입자망 개방 등을 통해서 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진정시키고 중복 투자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 그리고 통화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 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모든 초고속망 투자를 중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가입자구간의 통신망을 중복 구축하는 것은 설비가 유효화되거나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신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망, 장거리망은 중복투자가 없습니다. 다만 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연결하는 망을 지금 인터넷 사업자간에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서 추정할 때 앞으로 계속 5년간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약 7,000억 정도의 중복투자 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에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후속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선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스스로 그 설비를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복투자 우려가 큰 가입자 선로를 통신사업자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의 도로굴착 허가에 정보통신부와 사전협조토록 하는 방안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개방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복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權五乙委員**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8월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중복투자 대책을 조사 발표했었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전국 곳곳에 다녀보면 우리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휴대

폰기지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마다 곳곳에 산에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도 공용으로 쓰면 충분할 텐데 물론 민간기업이 경쟁 차원에서 자기들이 선발주자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환경 버리고, 돈 버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가입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부에서 8월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니까 주로 한국통신이 가장 많이 기 투자 되어 있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예.

○權五乙委員 만약 기타 사업자들이 한통의 기 설치된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나중에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지금 현재 한국통신의 경우에 자기네가 선로를 먼저 투자해 놓으니까 경쟁사업자가 출현해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쟁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은 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그것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을 법안을 만들었고요. 한국통신도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싼 값에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네트워크 경쟁사업자가 출현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요즘은 아주 활발하게 공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선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음에 사업자를 지정해서 5개 사업자가 했을 때는 각자 망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단계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동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공동망을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법안의 개정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정부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망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IMT-2000이 됐든 네트워크의 중복투자를 막는 법적 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의 법안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중복투자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權五乙委員 하여튼 정통부에서 이번에 법안도 제출했고 또 지난 8월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민간기업이 자사의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

지만 국가기간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은 그래도 관여를 해가지고 중복투자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말로 국가적 낭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관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여를 잘못하다 보면 민간의 자율성을 해친다 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통부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安炳燁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在珪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高 위원님께서서는 도서벽지거주 장애인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서 복지시책의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리적 여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서 복지시책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영버스 요금면제와 또 1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한 연안여객선 운임의 50% 할인혜택 그리고 장애인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은 똑같이 부여받고 있고 또 장애수당 지급, 자녀교육비지원 등 각종 생활안정시책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벽지거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해서 도서벽지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서비스 체계를 보강해서 도서벽지거주 장애인들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高珍富 위원님께서서는 내년도 설치예정된 대통령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업발전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의 장단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통령 직속으로 위의 두 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특별위원회 운영경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高珍富 위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어제 질의하신 내용중 보건복지부 관련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보건의료 예산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보건의료 예산의 확충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사업의 예산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예산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2001년도 보건의료 예산을 지난해 대비 정부의 일반 예산증가율 7% 보다 훨씬 높은 28.6%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향후 설치 예정인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건의료 장·단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예산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高珍富 위원님께서서는 국가정신보건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추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법 제정시에 정신보건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재정형편상 정신보건연구기관을 미처 설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신보건시책과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보건연구원이 설치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서는 상승하는 실업수준을 현행

사회안전망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대량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갖추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2차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으나 정규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수행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업대책은 노동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실업의 대량화 또 장기화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생계곤란 그리고 가정해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를 보호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상담과 아동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와 쪽방거주자들에 대해서도 노숙자쉼터 등을 활용해서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또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유도, 가정복지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을 통해서 이들의 생계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煥委員 장관님, 실업대책은 그렇게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어보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시지요? 보고 못들으셨나요? 생명안전에 대한 입법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과학기술부장관께서도 답변 올렸습시다마는 몇 개 부처가 서로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부도 상당히 깊이 간여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입법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입법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金榮煥委員 조만간 입법을 할 것은 아니고 입법을 위한 준비와 용역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榮煥委員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나라의 전략산업으로 지금 생명공학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공학의 연구와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 인간복제 내지는 생명복제와 아주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공학의 연구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잘못 허용하게 될 경우에 인간복제라는 아주 심각한 윤리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따로 이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와 또 필요하면 산업자원부와 등등 관계된 부처가 이 문제를 충분히 국가를 생각해서, 이것이 미국에는 클린턴 대통령 산하에 생명복제에 관한 커미티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런 면에서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명복제의 금지와 생명공학의 육성이라는 양 측면이 잘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이 문제를 줄속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煥委員 고맙습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질의에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金景梓 위원님께서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호텔을 자주 이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 물으셨습니다.

金景梓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연관되는 것으로 12월3일 밤 어느 TV방송사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임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마흔여덟 번에 걸쳐서 한 번에 평균 80만원을 호텔에서 만찬경비로 지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환경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이해가 엇갈리는 당사자들을 만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장관이 직접 만나서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업무상 근무시간 이외에 자문회의, 토론회, 간담회, 정책회의 등 회의운영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소선택의 기준은 가능한 한 비용도 덜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찾기가 쉽고 교통도 편리하고 조용한 회의장소를 고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부는 그동안 프레스센터가 많이 이용을 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회관 등을 오찬, 만찬을 겸한 회의장소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 장소는 호텔 출장서비스팀 케이터링 서비스가 식음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경비지출 영수증이 고급호텔 명의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환경부는 모처럼 새천년 새희망환경인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2000년도 정책설명회를 겸해서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으로부터 420여명의 환경관계 인사를 모시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식음료 비용으로 약 78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서류도 호텔신라에서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플라자 및 여러 군데 음식점이 호텔이 아니면서 매출전표가 호텔로 잡히는 일반음식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호텔에서도 모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급호텔로 그렇게 오해를 빚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부담감 때문에 항상 절약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해서 더욱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알뜰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서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金景梓委員** 장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가 될 만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보도에 의하면 호텔에서 48회 회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金景梓委員** 그 48회 중에서 호텔이 아닌 곳에서 한 것이 상당수, 반 이상 그렇게 됩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景梓委員** 예, 됐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다음에 존경하는 柳三男 위원님께서 해양오염의 80%가 육상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연안 및 해양환경 개선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은 해양을 포함한 수계의 수질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리, 폐기물관리, 대기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분야 등 다양한 환경부문에 투입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수질분야에 약 32%, 그 외 분야에 나머지 68%가 배분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오염 방지사업에 대해서는 96년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따라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전국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67개소를 건설해서 하수처리율을 2005년 목표 23%로부터 64%로 제고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조 8,000억원이 투입되었고 67개소 중 22개소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45개소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예산의 확대에 노력해서 조기에 해양오염 방지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양오염의 상당부분이 육상쓰레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오염배출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오염물질의 양을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在珪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

의를 주셨는데 첫째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입장과 함께 환경부가 그동안 새만금사업 반대를 위해서 취한 조치 그리고 그간의 예산집행실적,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사업지구 내의 해양갯벌이 방조제로 인해서 인공담수생태계로 바뀌게 되는 등 해양과 담수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영향을 비롯해서 사업의 경제성 그리고 수질보전대책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조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99년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연구조사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조사단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찬반 양론이 담겨진 보고서를 금년 8월에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관련부처 기관별로 공동조사단 보고서 내용에 실려 있는 사항 중에서 소관사항을 각각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업무소관은 원래 수질보전대책으로 되어 있었고 환경부는 따라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제시된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시행해야 될 사업주체인 농림부 그리고 전북도 등으로부터 그 계획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수질을 과학적 모델링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예측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수질보전대책과 수질예측결과를 정해서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부처별로, 저희의 경우는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만금사업의 반대를 위한 조치를 그동안 한 일이 없고 또 예산집행실적도 없고 내년도에도 관련예산이 계상되지 않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별로 부분적인 소관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한 부처로서 아직 결론이 내려질 단계가 아닌 데서 반대를 한다거나 하는 입장개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의 뜻을 하고 있고 이 결과가 수합되면 관련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의로서 영월 동강보전을 위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는가, 향후 동강지역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동강지역은 래프팅이나 관광객 급증으로 해서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부에서는 래프팅을 통제하고 하절기의 생태계 훼손행위 그리고 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하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자체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계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동강보전을 위해서 환경부가 별도로 책정한 예산은 없습니다. 2001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오수처리, 상하수도 시설, 자연환경이용시설 등에 배정되는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동강지역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성수기 이전까지 지자체와 협의해서 동강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함으로써 예컨대 그렇게 되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전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중앙부처로서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동강살리기 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국민신탁기금을 조성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강지역을 국민의 이름으로 사들여서 보호를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고 다음의 ‘동강의 의제21’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민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들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국가적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의로서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페드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해

서 폐기물관리법의 관련조문에 해석을 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페드럼의 수집·운반사업자의 영업범위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7호에 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페드럼에 대한 법률해석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은 페드럼을 속까지 깨끗이 씻어서 세척까지 해서 유해물질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 페드럼속의 내용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상태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당한 해석이십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페드럼의 수집·운반조건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운반도중에 그 페드럼에 들어있는 폐유 등 오염물질이 흘러나와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무리없이 적용되도록 환경부로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장관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龍學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보면 환경관련사업들이 벌어지면 반대운동이 일어나는데 통상 보면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늘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끝 무렵 가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환경부가 슬그머니 끼어드는 것은 참 모양이 보기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 동강댐 같은 것만 해도 건교부에서는 밀어붙이는데 환경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만 나와서 열심히 반대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동강댐 같은 것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동강의 보전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보전문제에 관해서만은 환경부가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질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든가 ‘동강의 의제21’같이 민간주도 보호운동을 거론하셨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이런 민간운동보다는 환경부에서 앞장서서 주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환경부장관이 왜 목소리를 안 내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한 부처로서 NGO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돼서 환경부가 반대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되기 보다는 어떻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그것도 각 관련부처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일을 그런 방식으로 잘 처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한 부처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면서 반대해야 될 때는 반대하고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때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지역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가 앞장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가 있고 중앙 정부의 예산능력이 또 그러한 땅을 사들여서 보전할만큼 아직 우리 현실이 그러한 여건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결국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 지역이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앞선 생각을 가진 분들의 합작품으로 해서 잘 보전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저희 중앙 정부는 바라면서 적극 지원하면서 예산이나 제도적 측면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龍學委員**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바뀔 때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군요. 좋습니다, 환경부의 한계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관해서는 최종결론이 언제쯤 나오니까?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결론 나는 것인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는 하나의 관련 부처이고 지금 총괄조정을 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수질개선기획단입니다.

○**金龍學委員**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금 사실은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느라고 결과가 아직 성숙되지,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선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부처별로 하고 있는 작업이 충실

해지는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총괄기구의 장이 아닌 입장에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宋永吉委員**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습시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수질의제만 고민하실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갯벌 보존의 문제하고 치패의 발생지나 세계 5대 갯벌지역의 하나인 새만금지역의 갯벌보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 당 내부에도 의원들 상호간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느 것이 옳고 나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님이 직접 정부 내부에서 이 문제 의사결정과정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안 내주면 시화호 때도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리석은 정책을 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 붓고 다시 그것을 담수호에 실패해서 다시 해수호화 시키면서 바다만 오염시켰습니다. 두 배가 넘는 새만금 이것이 저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개진과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정책에 보조하는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의 가치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柳三男 위원님, 宋榮珍 위원님 그리고 高珍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柳三男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감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기르는 어업 및 자원조성 등 수산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적정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서 한·일어업협정 또는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선감척예산을 제외할 경우 수산부문의 예산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 부처의 사업비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예산을 포함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증액된 점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신 정부 관계부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선감척 예산의 문제를 수산부에서 자기 예산을 부분적으로, 다른 예산부문을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은 특별히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반적인 수산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따로 보조해 주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그 중간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주면서 또한 다른 부문 예산을 깎아서 감척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시장이 개방되고 인접 연안국가의 어업협정 등으로 인해서 수산업의 여건이 아주 악화되어 있어서 이대로 수산업을 유지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어선감척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과 기르는 어업에 특단의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선감척 예산을 특별한 예산소요로 보고 내년엔 가서 그 부분, 조금 더 준 부분을 깎아버리게 되면 수산예산이 아주 어렵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기왕에 조금 그렇게 계속해서 어선감척 때문에 배려해 주었던 것을 일반 어선감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수산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수산부문에 상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또 관계부처들을 잘 설득해서 내년엔 올해 조금 늘었던 예산이 또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수산부문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柳三男委員 장관님,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해양수산부가 차지하는 정부예산의 비율이 1.36%입니다. 이레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관님께서 투쟁 좀 해주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柳三男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왕의 예산편성의 흐름을 조금 무시하고 내년에는 논리도 잘 갖추고 때도 좀 많이 쓰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양개발예산과 관련해서 해양과학기술개발의 R&D 예산의 확충문제 그리고 심해저광물자원 기술개발 예산의 확대대책, 해양에너지 개발의 예산을 증액할 용의, 대륙붕 조사사업의 확대용의, 해양신물질 개발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분야의 R&D 투자비 확충계획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 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에서는 해양과학기술분야의 R&D 투자비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키 위해서 매년 이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 R&D 예산안의 경우에도 2000년 예산 423억원보다 28%정도 증가된 54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분야의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시 여러 가지 논리를 갖추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2001년도 예산으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채광, 양광 및 제련 등 심해저광물자원 기술개발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주어진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해서 심해저자원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2010년 상업생산체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해양대체에너지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인 조류, 조력발전 등의 해양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의

연차적 증액을 합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조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현장 해양조사와 조류 및 조력발전용 터빈의 특성연구에 사용하였고, 2001년에는 5억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화호 조력발전 개념설계 및 한·인도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공동연구사업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울돌목에 관한 시험발전사업에 관해서 17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던 시기는 예산편성 단계를 조금 지난 시점이고 또 그 사업의 요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의 뒷받침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미처 요청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혹시 특별히 배려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좀 차질없이 내년초에, 다음에라도 예산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술분야에 관해서 자료를 더 수집하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륙붕 조사사업 확대에 관해서는 앞으로 있을 중국,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800km의 동중국해 대륙붕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조사면적을 조정하여 예산을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대륙붕 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신물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부에서는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조류, 노화방지물질 등 3개 물질의 특허출원을 하는 등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해양생명공학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동 계획에 따라 해양생명공학 예산의 연차적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柳三男 위원님께서 수산물 검사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부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산물 검사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게 되는 어병검사 수요와 인천공항 운영에 따른 새로운 검사수요의 발생 등으로 조직개편과 검사전문인력 증원이 요구되는 한편 검사장비의 확충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검사장비 121대에 대한 예산으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검사인력 76명의 증원 및 고해상질량분석기 등 부족한 검사장비 51종, 176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내년 2월까지의 조직확대를 용납하지 않는 타이트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조직확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산물부분에 있어서 다이옥신 등 몇 가지 물질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사장비를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또 들어와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그 검사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도 인력과 장비의 수요가 발생해 있고 또 그 외에 지난번 꽃게문제로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처럼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높이고 조금 더 검사를 강화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인력을 좀더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의 구조조정이란지 긴축재정이란지 이런 것 때문에 원활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더 달라 또는 인력을 더 달라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수산물의 안전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소한도의 인력은 더 확보되어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정부의 인력확대 통제의 방침이라고 할지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어도 수산물의 검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장관님, 정부의 구조조정도 중요하고 인력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입수산물 검사는 확실하게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하나하나 보장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수입수산물을 공급하는 공급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두 번째 말씀하신 수산물 수출국에서의 확실한 검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연말 안으로 중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점에 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柳三男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뿐만이 아니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많이 반송된 것을 자료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수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점 각별히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리고 본 위원 본질의 중에서 항만개발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항만개발예산에 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柳三男委員**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포함해서 정부측에서 이것을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항만개발투자비가 정부 전체 SOC투자비의 6.7% 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삼면이 바다이고 물류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되고 있는데 항만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인색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평택항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001년도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해서도 완공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또 인천북항 신항만을 개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민자유치가 안 되면 빨리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전혀 기울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대정부 투쟁을 해서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과거의 항만개발에 관

련된 예산이라든지 집행추세를 보면 매년 항만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항만을 건설해 가다 보면 항상 예측치보다 실제의 물동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바람에 항만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96년도에 항만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그때 2011년도의 물동량을 예측해서 세운 계획을 보면 민자부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자부문은 IMF상황을 거치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항만개발 전체가 대단히 지체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항만 물동량의 증가추세는 그전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 2011년에 가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물동량의 예측에서부터 항만건설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의 항만개발 중에서 민자유치가 거의 확실하다고 예측되는 부분 이외에는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항만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민자에 의존하고 얼마만큼을 정부가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계획을 다시 짜서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통특별회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에 6.7% 정도로 머물러 있던 항만부문의 배정비율을 10% 정도 이상으로 올려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항만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항만개발투자가 물론 민자는 거의 기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GNP의 0.43%를 항만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대만은 2.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1조가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동북아 해양물류중심국이라는 것이 도저히 성취가 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항만시설 부족량이 5,663만t인데 이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큰 항만인 인천같은 경우를 보면 1년 화물은 1억 1,000만t인데 1,675만t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적체가 심해서 항만서비스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장관님이 물론 많이 하시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처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16%나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들을 때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형항만도 중요하지만 소형, 시골 어항들 2종 어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정부혜택을 못 받는 어항들이 있습니다. 그 어항에 대해서 영세어민들이 사용하는 어항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柳三男委員**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항만부분에서 기여도가 전체 GDP의 7%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柳三男委員** 그러면 그 GDP의 7%에 해당하는 예산이 해양 쪽으로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예산의 불균형이고 편향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GDP 기여도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회가 여러 가지 전환기에 처하게 되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국가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투자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공적자금 투입에 따르는 금융정상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모레부터는 부별심의에 들어갑니다. 부별심의를 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해서 세밀하게 의논할 수가 있고 또 내일 기획예산처장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회의가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의 투자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빈도가 적은 산간벽지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고한 대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정말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항만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柳三男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요측면에서 보면 당장 항만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도로를 깔지만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의 어떤 밀접한 연계체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柳三男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GDP 기여도의 7%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주어야 된다 이와 같은 단순논리는 국가재정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은 꼭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대체적으로 보기에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항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96년도에 세워진 항만투자계획이 민간부분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항만투자의 차질이 빚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그동안에 항만이라는 것이 전체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시설 수준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항만 그 자체가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체가 하나의 돈이 되는 산업으로 이렇게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잘 하면 제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했었던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宋榮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항건설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답변하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께서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대책 및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선의 우리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 침범조업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업지도선과 해경경비정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어선이 주로 출현하는 서남해안에 중점 배치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 231척이 있는데 그중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20척, 해경이 211척 이렇게 되어 있고 99년에 80척 정도의 중국어선을 나포했고 올해에는 11월까지 58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단속하고 감시해야 될 해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한·중 어업협정 관련회의 및 외교경로를 통해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의 방지를 계속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우리 수역에 침범한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어획물과 어구 일체를 몰수하고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업지도선 증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5척인 어업지도선을 2005년까지 38척 정도로 늘릴 예정으로 있으며 매년도의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어업지도선예산은 3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재정 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올 2000년에 감축한 어선을 지도선으로 개조해서 5척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역시, 어선감축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을 깎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마는 이 요인이 내년, 후내년에 가서 좀 줄어들게 되면 수산부문에 있어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총액으로 받아 놓은 부분이 깎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浩雄委員 국무총리께 질의한 답변은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총리께서 하시지요.

○李浩雄委員 총리가 안 계시잖아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마지막날 나와서 하시니까요.

○李浩雄委員 어제 질의한 것도 마지막날 다 하신다고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렇지요. 총리께 질의하신 내용은 마지막날 총리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실 겁니다. 그간에 다른 장관님들이 답변하신 것은 빼고요.

○李浩雄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趙成台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서는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과 전담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해킹 및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전산통신망을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한 후 별도의 보안장비와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39명 규모의 컴퓨터침해사고대응반 일명 CERT팀을 편성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하여 사단급 부대까지 CERT팀의 조직을 확대하고 우수자원을 엄선하여 민간전문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산특수사관, 소프트웨어개발 특기병 등 특수기능보유자를 별도로 모집 양성해 나갈 계획도 아울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榮煥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언제 보완이 된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趙成台 금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보완했습니다.

○金榮煥委員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가 국정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사이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서류가 나와 있어서 아마 이런 조치와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안전담팀이 1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6명은 겸직된 상태로 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처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전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을 전부 신청해서 예결위 자료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선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고 해킹이 되었을 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통제하는 탐지시스템이 있고 다음에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는데 이것이 다 되어 있는 데가, 설치된 기관이 정부 48개 부처 가운데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데가 9개가 있고 보안진담반이 있는 데는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부처가 이런 정보보안에 대해서 전부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인데 국방부는 특히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전자전이고 정보전인데, 걸프전 예를 들 것도 없이 바로 그런 것이고 사이버 사단을 창설해도 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보완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趙成台**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이 많으니까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나오셨기 때문에 빨리 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여덟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羅 위원님께서서는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성장, 유가 등 내년도 전망이 달라졌으므로 이와 같은 전망변화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총리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까마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孫泰仁 위원님, 金學元 위원님, 裴基善 위원님, 金榮煥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李在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여건은 여러 가지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라 경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경우에 2001년도 우리 경제는 5내지 6%의 실질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으로 8내지 9%의 경상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발표한 KDI 등 대부분 전문연구기관들의 최근 경제 예측도 내년도 8내지 9%의 경상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예산은 이와 같은 경제전망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므로 SOC, 농어촌 등 분야별 일부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세입세출 총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羅 위원님께서서는 SOC 등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과 2001년 예산안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孫泰仁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이 중기재정계획과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99년1월에 작성·발표한 것으로써 당시 99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이 8%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당시 계획의 기본목표와 내용은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 경제상황은 99년 10.7%의 성장, 2000년 9%의 성장으로 전망되고 실업률도 3 내지 4%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는 등 기본적인 재정여건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이 중기재정계획과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완예정인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羅 위원님께서 SOC 예산배분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金學元, 宋榮珍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SOC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내년도 SOC 예산규모는 금년도 수준인 14

조1,000억원으로 책정하였습시다라는 이는 지난 수년간 SOC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 정부부문의 SOC 투자규모가 매우 커져 있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5년부터 2000년간 재정규모는 1.7배 늘어났지만 SOC투자는 2.1배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규모증가율이 6.4%로 됨에 따라 얻게 되는 가용재원은 6조원 수준에 그친 반면 지방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필수적 증액소요가 10조원에 달하는 어려운 재정여건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발행규모의 확대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나 여타 부문 예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도 곤란하기 때문에 SOC 부문 예산의 대폭증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별심의 또는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羅 위원님께서서는 농촌지원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농어촌부문 예산은 지방교부율 상향조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필수적인 증액소요가 세출규모증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어려운 재정여건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수준인 9조3,193억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농어민의료, 농어촌도로 등 농어민복지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예산을 포함할 경우에 실질적인 농어촌지원예산은 5.1%로 증가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부문 예산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계화, 용수 및 배수개선 등 생산성 제고와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동시에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그리고 어선공제료에 대한 신규 지원 등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羅 위원님께서서는 비상경제운영계획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은행권,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재정경제부장관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인 재경부장관이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차질 없는 계획이행으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거해서 포철, 한전, 한국통신 등 11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

에 있습니다.

포철,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한국중공업 등 7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식시장여건 등을 감안하되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하였으며 한국중공업은 지분 24% 공모매각에 이어 연말까지 지배주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기업은행보유지분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12월12일에 발행할 예정이고 한국통신은 해외통신업체와 전략적 제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민영화의 추진을 위해 관련입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법률이 산자위를 통과했고 전기통신사업법, 담배사업법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며 시장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매각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羅 위원께서는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계층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4월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득불균형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조세의 소득분배기능강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일자리 창출시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같은 소득분배개선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계층간 소득분배구조는 OECD 국가수준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지역특화산업육성, 도서·농어촌생활여건개선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지원규모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경제활성화 등 지방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정

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羅 위원님께서서는 98년도 이후 인건비 증가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대폭 삭감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98년 이후 IMF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2년에 걸친 보수삭감과 인력감축, 정년단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우수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해서는 보수현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羅 위원님께서서는 사회복지예산편성이 생산적 복지보다는 소비지출에 치중되었다고 지적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2000년 7조원에서 8조1,00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의료보험지원 등 불가피한 소요에 주로 기인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활공공근로, 취업알선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羅午淵委員 방금 답변하신 국민기초생활보호에 관련된 것은 부별심의 때 별도로 심도 있게 따질 예정입니다. 지금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요전의 정부정책의 설명에도 그렇고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마치 하루아침에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정말 자신 있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답변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지금 4대 부문을 개혁해야 할 이 과제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사실은 IMF사태가 우리한테 엄습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부문이나 기업이나 금융부문에 있어서 과거 삼십 년 동안의 개발과정에서 쌓여진 거품을 제거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羅午淵委員 그런데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말하자면 목표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옳게 되지 않고 겉으로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많아요.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기업의 구조조정, 예를 들면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를 좀 줄이는 것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인원수를 줄이는 대신에 엄청난 급여를 갖다가 올려 가지고 실제로는 기업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조폐공사 경우를 보니까 기능직 1인당 월 봉급이 평균 300만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봉급이 많으니까 인원수 몇 사람 줄인 것과 봉급 올라간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 또 한전의 경우도 지금 이면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한전의 경우 이면계약은 없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공기업부분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여러 가지 개혁에 있어서 노조와의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12월 말까지 대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장과 임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서 공표를 하고 사장이 반개혁적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기업에 잉태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羅午淵委員 제대로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문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이제 답변 들어보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오히려 조세가 근간에 와서 분배가 더 왜곡된, 직접세가 오히려 더 줄고 간접세가 더 늘어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때에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역간에, 계층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

씀을 하시는데 지역간 균형문제도 그래요. 근간에
올수록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쪽의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건설업체가 거의 다
도산되고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된 그런 현상이 일
어나고 있는데 지금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한다 그
러는데 그것이 어디 하루 이틀에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보
다 구체적으로 실효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적
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羅午淵委員 그리고 제일 먼저 질의했던 것 중
에 경제전망치,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
과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
는데 아까 1년 전에 만들었던 중기재정계획이 1년
동안의 상황변화라고 해 가지고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벌써 5, 6월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8, 9월 그때의 경제전망을 가
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명백하게 달라진 것
이 환율만 해도 그때는 1,100원 정도 수준에 있었
는데 지금 1,200원선 아닙니까? 100원이 달라졌
다고 하면 환율이 거의 10% 정도 달라진 것인데 상
당히 큰 변동이지요. 게다가 또 경제성장률, 실질
성장률, 불변성장률을 갖다가 오류%로 보고 있는
데 이것은 8, 9월 그때 본 수치이고 지금 경제연구
소에 따라서는 4.4% 내지 4.5% 정도로 이렇게 낮
게 잡아 보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거의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
기에 대해서 예산의 국회통과 과정에서도 이런 것
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
고 이렇게 해서 전망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또 할 일도 있으니까 이 다
음 기회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실질성장률이 삼사%
갈 것이라고 한 말씀은 11월…….

○羅午淵委員 내가 삼사%라고 안 했어요. 4.4%,
4.5% 이렇게 보는 기관도 있다 이런 얘가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11월 KDI하고 민간경제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5 내지 6%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羅午淵委員 그 사람 한 기관의 말만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소비가 상당히 줄고 있지 않

습니까? 소비가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일 영향
을 많이 미치는 것이 부가가치세하고 특소세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특소세 합치면 그것이 전체
세수입의 적어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수
에 많은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한번 짚어 볼 필요
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羅午淵委員 부별심의가 또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두 번째로 존경하는 柳
三男 위원님…….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으로 하시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孫泰仁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孫泰仁 위원님께서서는 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이 추경기준으로 6.4%라고 하나 본예산 기
준으로는 9% 이상 증가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하
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學元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
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재정규모 증가율 기준과 관련하여 본예산은 추
경예산보다는 훨씬 전에 예측한 경제전망을 기준
으로 한 것으로서 정확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추경예산은 예산회계법 33조에 의해서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당해 연도
경제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최종 재정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의 재정규모는 추경예산을 기
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두 번째로 孫 위원님께서서는 세계잉여금은 예산
회계법 47조에 의해 반드시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
겠습니다.

예산회계법 47조에서 세계잉여금을 국채 및 차
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세계

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세계잉여금은 가능한 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여야간 합의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안에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孫 위원님께서서는 경제가 어려워져 국제 세입이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므로 세출예산도 이에 맞추어서 삭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방금 羅午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孫 위원님께서서는 99년도 상반기에 발표한 중기 재정계획에서 재정규모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SOC 투자가 내년예산안에서는 0.1% 증액에 그치는 등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도 羅午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같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孫 위원님께서서는 SOC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지방발전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지역간 균형발전이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이 되고 SOC 투자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위원님과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해야 하고 금융구조 조정 이자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 교부금 등 당면한 지출소요를 감당해야 하는 불가피한 여건으로 그동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SOC 부분에 대해 재원을 많이 배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정에서 적극 뒷받

침하겠습니다.

孫 위원님께서서는 예비비 규모는 예산의 1% 내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01년 예비비가 확대된 사유를 물으시고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대통령 해외순방경비, 재해대책비 등은 소관부처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金學元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예비비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추정편성이 불가피한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비비가 증액된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와 예산회계법 24조에 따라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소요 2,600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 등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이 예산이 지니는 특수성과 주변 안보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해외순방경비는 상대국과의 외교적 협의에 따라 시기, 내용 그리고 규모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예산편성시 소관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대책비는 자연재해의 성격상 발생시기, 부문별 피해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여 소관부처의 일반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金學元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沈揆喆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적자금 조성은 금년이 마지막인지 물으시면서 또다시 공적자금을 요구하게 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경부장관과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까마는 주무부처 장

관인 재경부장관이 답변드리는 것이 소상히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둔화, 교부세 증가, 복지 지출 소요증가 등의 재정여건 악화로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지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교부세 증가,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 소요의 증가로 우리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자의 대GDP 비율이 99년 마이너스 2.7%에서 금년 마이너스 2% 이내로, 내년에는 0.2% 이내로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도 크게 줄어드는 바람직한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마무리하여 경제 활력을 하루빨리 회복토록 하고 재정제도 혁신을 통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지원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柳 위원님께서서는 소모성·낭비성 예산지출을 삭감하고 국민 세부담은 대폭 경감해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소요 면에서 법정경비, 국채이자 등 필수적인 증액소요가 10조원 이상 되었으나 그동안 한시적 세출소요 삭감과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최대한 축소해서 재정규모가 6조원 수준의 증가에 그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민간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재정건전화를 저해시키게 되므로 세부담 경감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柳 위원님께서서는 성과중심의 예산체제 구축과 예산결산의 연계가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정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16개 기관에 시범도입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8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1회계연도 결산부터 이삼 개월 앞당기도록 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성과 측정 등 결산의 평가분석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총 사업비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사업 300개를 선정해서 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申鉉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 위원님께서서는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시면서 현재 국가재정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채무축소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99년 말 현재 우리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2% 수준으로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72%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 번 늘어난 국가부채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금년 들어 여야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여야 협의과정에서 현실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정부로서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申 위원님께서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출 삭감노력이 없는 등 국가채무 축소와 균형재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시고 의료보험 지원, 대북사업 등의 추진으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면서도 SOC 투자 및 농어촌 예산 등을 동결시켜 고용창출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의지는 없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와 재정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재정 건전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법정경비, 국채이자 등 필수적인 증액소요가 10조원 이상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 6.4%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금년 예산상 마이너스 3.4%에서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0.2%로 대폭 개선하고,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규모도 금년 예산상 11조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크게 축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세출소요를 삭감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엄격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자금 이자지출 증가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그동안 취약했던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확대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C 및 농어촌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앞에서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왔다는 점과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申 위원님께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제품소개를 위해서 해외교포 무역인으로 구성된 해외한인무역협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교포 무역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해외한인무역협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업자 단체 간 형평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鉉泰委員 장관님, 지금 해외한인무역협회의 지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양 6대주에 1,600여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에게 우리 한국의 이 달의 히트상품 또 신상

품 소개, 또 지역특화상품, 또 크리스마스,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이날, 이런 가정의 달,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등 계절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우리 국내 상품을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해주면 수출증가가 엄청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타 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KOTRA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 우리 국가경제에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KOTRA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KOTRA 사장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申鉉泰委員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수출업체들이 바라는 일이고, 또 해외의 한인무역인들에게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스스로 자립을 통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도와온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OKTA를 통해서 더 많은 수출을 좀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KOTRA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申 위원님께서서는 어음보험기금에 대한 대폭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음보험기금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으로 지급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 초기에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2,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어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험료 등으로 보험기금의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음보험제도를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과다한 기금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민간보험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간시장의 역할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申鉉泰委員 장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음이

부도나는 요인이 어느 편에 많이 있다고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중소기업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鉉泰委員**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동원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해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나면 중소기업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받은 어음으로 인해서 부도를 당하게 되고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금이 소요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이 제도를 했으면 정책적인 보완을 해가면서 나가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시행해 나오면서 17배 운용배수로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에 1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못 하겠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받고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물부문에서 자금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제정에 있어서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원칙과 합리적인 규율, 재정규율이라고 합시다. 이런 규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을 빗나가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단 이와 같은 어음보험기금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관계설정들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申鉉泰委員**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어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과 같이 기업 퇴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마저 정부에서 외면한다고 하면 과연 기업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의욕이 꺾일 때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고 그 붕괴로 인해서 사회안전망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다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기왕 시행하고 있는 일들을 더 확

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앞으로 더 확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100억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300억 규모로 기금이 조성되니까 사용추이를 봐가면서 확충여부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申鉉泰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소한도 500억 정도가 있어야 이 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중소기업인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믿음이 가게끔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申 위원님께서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해소를 위해서 광역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광역철도와 같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역철도는 국가가 건설운영 주체이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있지만 광역도로는 대부분 지방도 또는 시내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이고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할 때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申 위원님께서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용의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에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대출 금리는 대부분 재정융자특별회계 운용금리에 연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실업자 대부자금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의 금리도 중소기업자금과 같은 7.5%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만의 금리인하는 계층 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금흐름의 왜곡 등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委員** 장관님, 지금 문화관광부에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이율이 각 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주든지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

는…….

○**申鉉泰委員** 월드컵대비 문화관광상품 개발 시책과 관련해서 업체당 3,000만원씩을 지원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율이 3%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申鉉泰委員** 하여튼 어느 기금에서 지원하든지 어느 분은 3%고 어느 분은 몇 %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정책자금으로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하여튼 기획예산처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특수 계층에 대한 대출금 금리는 7.5% 수준으로 거의 수렴이 되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정책금리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금융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우에는 영세민 생업자금도 7.5%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영세민 생업자금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申鉉泰委員**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제5공화국 당시에 금리가 십사오%대로 가던 것이 칠팔%대로 떨어뜨려 준 적이 있지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진 적이 있었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이제는 분명한 자금 유통이 있어서 그 중개기능이 경제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다소의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담고 그와 같은 금리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申鉉泰委員** 장관님께서 좀 중소기업의 어려움 점을 이해하셔서 이런 정책적인 금리를 인하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浩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경제지표는 무엇이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은 5 내지 6%의 실질성장, 3% 수준의 물가상승, 이렇게 전제를 잡으면 8 내지 9%의 경상성장률을 우리가 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기전망은 예년과 같이 KDI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참고해서 재경부와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채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주변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용유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유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이 내년 3월에 개항된 후 항공수요 추이를 봐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浩雄委員** 지금 추이를 보아 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장관께서는 항공수요 증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 보고는 제가 그 건은 알지 못하는데…….

○**李浩雄委員** 지금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공수요 증가율이 19%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에 1단계 사업에 의한 공항이 개통이 돼야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어느 정도 수준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개항이, 오픈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항공수요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李浩雄委員 정부 살림을 계획하는 기획예산처에서 개항하고서, 실제로 전부 꺾어봐야만 알겠다, 그때 가서 대비책을 세우겠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수요가 확 증가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 수요는 증가되고 다시 제2사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하면서 전부 들여놓았던 장비며 인력이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중단하게 되면 그냥 놓아두어서 다시 해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낭비가, 또 그만큼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않으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글썄, 그런 점이 있는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집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제여건이 나쁘니까 예산 삭감해라, 한쪽에서는 SOC 예산이라든지 농림 예산을 더 늘려라, 이런 상반된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시는데 아직까지 개항이 안 된,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미리미리 2단계, 3단계까지 준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마는 이걸 지금 개항이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어느 정도 승객이나 화물의 유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건…….

○李浩雄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공수요 증가율이 이미 19%가 넘는다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나오고 인천공항 개항 초에 취향예정이었던 외국 항공사 수도 당초 목표인 45개보다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취향편수도 지금 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현상들을 본다면 뻔히 이렇게 보이는 그런 수요 증가율에 대해서 단지 팽창예산 하면 안 된다, 예산 팽창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고 줄이라는 거지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정부에서도 그것이 일단 계획이 돼 있으니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지금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부지 조성 및 시설 설계비용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336억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됐던 이 336억, 그건 부지 조성 및 시설설계 비용, 기초비용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외곽 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浩雄委員 아니요. 2단계 사업이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 문제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2연륙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및 민자사업자 선정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연륙교 사업은 현재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접속도로를 포함한 효율적인 연계교통망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국고 소요에 대한 재원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심의 상정해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문제는 주무부처인 건교부에서 사업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절차를 거쳐 이루어짐을 말씀드리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심의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체되면 개항하고 나서 교통체증이나 혼잡이 아주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연륙교 건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제2연륙교가 개통이 돼야 되거든요. 걸리는 소요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인천의 공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상징적인 공항이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의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공항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께

서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지역적 이해의 요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처 장관께서 검토하셔서 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적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천시 지하철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시 지하철건설비 지원에 있어서 도시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91년에서 97년간의 건설비 국고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서 소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형편상 지원 잔여소요를 2001년부터 2005년간 연차적으로 분할 지원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李浩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宋榮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高珍富 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申溪輪 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裴基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裴基善委員** 서면으로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一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委員長代理 丁世均** 서면으로 하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榮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는 금번 세수추계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羅午淵 위원님 질의에 같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고소득자,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적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26개의 조세감면 규정을 축소 내지 폐지하였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세정면에서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등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함으로써 세입기반 확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43개 공공기금 중 22개의 기금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1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40년 만에 최초로 실시한 99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방만한 사업의 억제, 예산사업과의 중복지원 해소 등을 도모함으로써 금년도 계획상 11조원 수준에 달하는 전체 기금재정 수지적자가 2001년에는 균형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는 서민주택 지원 확대, 국채이자 소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와 자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기금별로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심의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심의가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개정해서 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회를 설치함으로써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년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회의 평가와 사전 조정결과를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權五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權 위원님께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부채경감 대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權琪述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에게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 자금 대체지원, 농어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전체 국가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대책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權五乙委員 장관님, 기획예산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 계수조정소위 계수조정결과에 따르겠다고 해서 예결위에 공을 넘기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부라든가, 정부에서 제출한 부채대책안 자체가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권이러든가 2차·3차 산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해 주는 것과 농가부채에 투자해 주는 것의 논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못 해주느냐 그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농가부채에 공적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길래 거기는 150조를 퍼부어 넣으면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인색하냐 이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權 위원님, 공적자금이 농협중앙회라든지 수협중앙회에는 들어가고 있고요.

○權五乙委員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농가부채 대책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우채권이라든가 기업에서 부실채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농가부채하고는 전혀 상

관이 없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래서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權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정부도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현재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五乙委員 아울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현재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한 번 한다, 한다 해 가지고 정부대책의 수위가 올라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위하기 전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한 번 시위한다고 몇천억 더 나오고, 두 번 하면 또 몇천억 더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 문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權五乙委員 국회에서 하는데 정부 재정당국에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뒤를 빼니까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재원대책은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權五乙委員 재원대책을 예산당국에서 마련해 주셔야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산을 제출했으니까…….

○權五乙委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아침에 재경부장관이나 기획예산처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만나셔서 이 문제를 논의하신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나 농정을 보는 시각이 참 문제가 많아요. 정말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정 포기하려면 아예 포기하세요. 정말 전부 다 수출해 가지고 외국 농산물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농사 다 포기하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權 위원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5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15조 농특회계 사업이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 직후에 농어촌에 대한 애정이 정부로서는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왔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45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농정에 대한 시각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權五乙委員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안 그렇습니까? 농림예산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다.

다른 분야 예산은 다 늘어났는데 농림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해양수산 예산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도 '농림 예산, 해양수산 예산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부채대책의 예산으로 전환해라' 그것 말이 됩니까?

차라리 공적자금 150조가 안 들어갔으면 농민들이 저렇게 나대지 않아요. 공적자금 110조 어떻게 썼습니까? 전부 원금상환도 되지 않고 이자는 이자대로 들어가고, 편법 써 놓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농민들 나대지요. 노동자들 나대지요. 사회 각 분야에서 "왜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왜 관리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고픈 것 참습니다. 고르지 못한 것은 못 참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權五乙 위원님, 공적자금 주무장관은 재경부장관이시니까요.

○權五乙委員 재경부장관 계시지만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나 똑같아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이따가 재경부장관께서 權五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왜 농민들한테 공적자금을 투입 못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에 대해 답변하세요.

○權五乙委員 그리고 이 부채문제가 나타난 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세우실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농가부채 예산 세워 주셨어야지요.

데모하고 시위하면 예산 줄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농민들 시위하고 노동자들 시위한다고 예산 주면 안 돼요. 그것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정말로 사 줄 것은 분명히 사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내용이 어떻든 간에 농가부채문제도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權五乙委員 그래서 저는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金大中 정권의 농정 실패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연속성을 가졌던 정부가 농가부채를 키워 왔던 것 아닙니까? 정책자금을 주었으면 관리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30대, 40대, 50대, 정말 농촌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계층에서 부채가 많습

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정부가 농가부채를 키워 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權五乙委員 정책자금을 주고 축사를 지으라고 했으면 관리를 해주었어야 되고, 대규모 전업농을 하라고 했으면 관리를 해주었어야지요. 돈은 평평 주어놓고 관리는 안 해주고…….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러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었으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權五乙委員 탕감이 아닙니다. 원금은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낮추어 달라고 하고 상환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사 기업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좀 탕감해주면 어떻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여러 가지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한 것 자체가 농민에 대한 애정표시였습니다.

○權五乙委員 애정표시인데 현정부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정책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權五乙委員 현정부 들어와서 마련해서 지원한 게 뭐가 있어요? 현정부 들어와서 농정 예산은 계속 줄어들었던 말입니다. 현재 그래도 구조조정 사업이라든가 농특세 사업을 한 것은 92년부터 97년 사이, IMF가 온 다음부터는 농촌에 대해서 투자가 전혀 안 됐어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과거 정부가 했던 것 이상으로 해야 그 정부가 잘 한 것입니까?

○權五乙委員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權五乙委員 본 위원이 장관께 묻는 핵심은 이 나라 농사를 포기하시려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포기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농촌에서 농사를 짓게 해서 빚을 지게 하고 교육을 못 시키게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재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제안설명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IMF사태 때문에 우리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것을 균형재정으로 빨리 회귀시켜야 할 과제가 있고, 또 세계화와 정보화 과정

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여기에 21세기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할 과제가 있고, 시장경제 체제로 옮겨가면서 지금 세계화 과정에서 시장경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에 필요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權五乙委員** 사회안전망 장치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놓고 먹는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막 갖다 주어도 됩니까? 정부 예산을 그렇게 막 써도 돼요? 공적자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회수 안 되는 원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계속 재정을 운영하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영세민들이 있는데에서 놓고 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효율추구의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charity economy, 나눔의 경제를 하자는 것이 지금 선진사회에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대책을 놓고 먹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權五乙委員** 농가부채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내놓는 이야기가 도시 영세민하고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 영세민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됐단 말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러니까 농가부채 문제는 지금 여야 간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丁世均** 장관님! 잠깐만 계십시오.

○**權五乙委員** 농촌에 3년 동안 5조 이상 투자를 해주었으면 농가부채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權 위원님 잠깐만…….

○**權五乙委員** 저는 정말로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이라든가 농정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노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權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농가부채 문제는 농림부장관,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여러 부처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만 하시고 부별심의 때 좀더 심도 있게 더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權五乙委員** 장관께 정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면 정부에서 보조해주어야 됩니다. 선진국 같이 농촌소득의 40%, 50% 소득보조는 못 해주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신용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자를 낮추어 주고 상환연기해 달라고 하

고 연대보증인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의지의 문제이지 재원 문제는 아니다, 정말 의지의 문제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앞으로 부별심의와 계수조정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것은 權五乙 위원이 많은 부분을, 농촌의 어려움들을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집권을 할 때 농가소득은 호당 2,34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 2,232만원으로 농가 호당 117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부통계입니다. 그런 데 반해서 농가 부채는 농가 호당 1,301만원에서 1,854만원으로 호당 553만원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에 재정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농업을 경제적 잣대로만 재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은 경제적 잣대로만 재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족의 생명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잣대로 재지 말고 농업을 살리려는 그러한 애정을,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애정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각종 농가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실 것입니다.

농민들은 경제적 잣대로만 재고 농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민들과 어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농민, 어민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재원을 배분하실 때, 정말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농촌과 어촌에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애정을 가져달라, 그래서 부채가 경감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두 분 權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대로 말씀드리어서 경제논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龍學委員** 장관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2001년도 예산에는 농가부채 해결재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농가부채 해결재원을 부별심의하고 계수조정 때 확보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현정부의 방침인 것이지요?

농가부채 해결재원을 결국은 현 예산안 범위 내에서 확보하자는 것이 지금 장관님 말씀이시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정부로서는 국회에 101조300억 규모의 예산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만약 농가부채를 해결하려면 이 제안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국회에서 대안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金龍學委員** 정부에서는 현재 제출된 예산안과 별도로 다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먼저 제안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체적으로 예산에 담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金龍學委員** 어차피 그렇다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그렇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방안은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있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규모축소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균형재정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채를 과감히 탕감해라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제한된 101조30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이 있고 규모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안 제안 전까지만 해도, 불과 국정감사 기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농가부채에 관해서는 미동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1월21일 농민들 소란이 한번 일어나니까 갑자기 법안을 만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는 농가부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방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현재 101조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보기에 해결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문제가 어렵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앞으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權五乙 위원님께서서는 최근 국채금리가 7% 수준이므로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 이자예산에 대한 이자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시고 예산편성 시 이자율을 9.5%로 책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 이자예산에 대한 금리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9.5%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시 금리동향을 참고로 했습니다.

최근 국채금리는 7% 수준이나 이는 금융시장불안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안전성이 높은 국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별 심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權五乙 위원님께서서는 청와대 특수활동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수활동경비 편성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단위 예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경비를 성질별로 분류한 49개 비목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비목의 구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고 있으며 현행 과목 구분상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위사업에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느냐의 여부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현재 청와대 사업내용 성격은 무엇이기에 때문에 특수활동비 해서 총액규정으로 편성을 합니까?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내용은 어떻길래 특수활동비를 보면 98년, 99년에는 99억4,5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다음에 2000년, 2001년도는 104억4,500만

원으로 금액 자체가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총액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이 들어가 있는 부서가 검찰, 경찰, 국세청 그리고…….

○權五乙委員 그것은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청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총액으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權五乙委員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 국정원 조정업무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침에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전보장 활동경비하고 여기에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특수활동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경비는 예산회계에 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하되 실질적인 심의는 국회법 84조4항에 의해서 정보위에서 하고 그것이 예결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활동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는 내용이 다르고 이것은 각 부처에 계상하고 있는데 부처에서 주로 특수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또는 수사활동에 관련되는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경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權五乙委員 그러면 청와대가 정보도 수집하고 특수한 수사도 하고 그런 데가 청와대입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청에 야당의원들 사정하라고 하고 야당의원 선거법으로 기소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까? 청와대에서 근거가 무엇입니까?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편성근거가……. 영수증도 한번도 쓰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무엇 때문에 써요. 차라리 예산총액의 내역이, 어떻게 쓴다고 하는 내역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예산으로 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수사 뿐만 아니고요. 고도의 정보수집이라든지 조사, 꼭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權五乙委員 아니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힘있고 깃발있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특수활동비 총액을 요청해도 기획예산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주고 책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원수로서 정보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써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權五乙委員 오래 되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당연한 듯이 예산을 책정해 주고 감사원에서는 당연한 듯이 감사대상 범위에서 빼버리고……. 실제로 어느 기관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총액으로 예산책정해서 지출하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총액예산을 이렇게 100억 이상, 청와대 예산의 한 4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관례상으로 해서 쓴다……, 기획예산처에서 내역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정말 내용 자체가 국가원수의 정보비로 쓴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한번 정말 체크해 보십시오. 내용이 무엇인지…….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五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金龍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 4대 부문 개혁의 전체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라는 판단하에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2001년까지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1월 현재 약 96%에 해당하는 감축을 완료하였고 국부유출 경쟁력집중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경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민영화라는 인식하에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서

18개 공기업 자회사를 정리하고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중 189건을 외부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서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9개 대상기관 중 금년 11월 현재 210개 기관을 완료하였고 33개의 공공금융기관과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실시해서 공공공금융기관은 15개 기관을 이미 개선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엄정한 점검평가제를 구축하고 개혁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감사원과의 공조체제 확립 등 필요한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金 위원님께서는 지난 99년도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는 농업투자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 투자방향인지 물으셨습니다. 재경부장관께도 물으셨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경제·사회여건과 재정여건 변화등을 감안해서 연동계획으로 수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99년1월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농업인구 감소와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5조원의 농특세 사업추진 등에 따라 농업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평균 재정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전재정으로 조기복귀 필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라든지 지방교부세의 상향조정 그리고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수립 등 새로운 재정소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투자를 비롯한 중기재정계획도 새로운 경제재정여건에 맞추어 앞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權琪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2001년도 세입예산안을 증액해서 국채발행 규

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경부장관과 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이신 재경부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權琪述委員**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 기획조정을 맡고 계시는 장관님으로서 지금 균형재정의 조기달성을 위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수납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세입수납 확대를 촉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예산목표치를 현실화, 상향조정하는 것이 수납을 확대 촉구하는 그러한 역할도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정의 건전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그러한 예산의 그런 정신을 반영시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촉구를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재경부장관에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만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만 됩니다.

역대 지금 10년 전부터 제가 역대 5년 전, 10년 전 계속 보아도 매년 해마다 예산액보다 약 10% 이상 징수결정액이 결정되고 거기다가 미수납액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을 해도 그렇게 해도 1% 이상은 세입예산이 초과되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됐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내년, 내후년에 결산을 하겠지만 세입이 아마 10% 훨씬 이상으로 초과수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내년도에도 상당부분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이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세입실적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국채발행 규모는 줄게 될 것입니다.

○**權琪述委員** 물론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목표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權琪述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항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축소해서 항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柳三男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때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저도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하

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權琪述委員** 그런데 장관, 항만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까 柳三男 위원의 답변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GNP 대비 항만투자비율이 일본은 0.43%, 대만은 0.28%, 우리나라는 0.1%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볼 때 일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동북아 해양 물류중심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것 도저히 목표달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항만시설 부족량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인근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월등하게 많 습니다.

인천은 지금 현재 1년에 1억1,000만t의 화물을 취급하는데 1,675만t이 부족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1억5,112만t의 화물을 취급하는데 연간 1,596만t이 부족하고 부산은 1억1,000만t에 1,113만t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부족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동북아의 물류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예산을 다루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항만화물이 예를 들어서 인천의 항만은 1년에 1억1,000만t을 취급을 합니다. 목표는 1년에 화물을 겨우 592만t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인천의 20분의 1 수준, 정확하게 19분의 1 수준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은 1,675만t이 부족하지만 지금 목표는 어느 정도냐 하면 111만t 여유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권역별 항만건설 총예산의 9.6%인 324억원을 목표에 배정을 했습니다. 인천은 254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신항만의 예산도 목표는 227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울산과 비교를 하면 제가 울산출신이라서 지역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울산항의 화물취급량은 목표항의 26배입니다. 26감절을 하고 있지만 권역별 항만건설 총예산의 울산은 6.8%, 231억밖에 안 됩니다. 목표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편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장관님은 모르고 계시는

지 알면서도 모르시는 척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과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權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업별로 어떻게 좀 균형이 깨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공기라든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또 지금 착공단계냐, 많이 진척된 단계냐, 완공소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權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아무 원칙 없이 재정규율에 맞지 않게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權琪述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비교를 합시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기술적인 문제는…….

○**權琪述委員**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시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밑의 직원들에게 이런 것 하지 마라고 좀 뭐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결국은 이 책임이 장관님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일례를 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개선시켜 보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장관님,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 구간을 2004년까지 중단시킨 반면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신규 착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서화합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 이남 구간의 예산은 중단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사업비가 변경됨으로써 당초 5조8,000억원이었던 예산이 18조4,000억원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선변경, 안전도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4년부터 대구이남 구간에 본격 투자해서 2010년에 서울에서 부산 전 구간 고속신선을 개통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주구간의 노선이 변경되어서 99년 말에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

고 지역의견 수렴 그리고 행정협의과정에서 매입 대상이 확정되어서 그간 용지매입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안에 대구이남 구간의 용지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 중 200억원 수준이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므로 내년에는 기확보된 예산을 우선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호남선 복선철도 위에 전기장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기간철도 전철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 등 여타 철도에 비해 오히려 전철화가 뒤늦게 착수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지금 두 가지를 장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 이남 구간에 지금까지 용지매수를 제대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두었어. 그냥 지금처럼 두면 2004년도에 거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주, 울산, 양산, 부산 그쪽 구간은 경산부터 시작해서 신라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문화재를 발굴하는데는 삼사오 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지를 그냥 착실하게 매수를 해도 2004년도에 착공이 될까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매수 비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 하는 것이 2004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호남고속철도하고 장관께서 호남 전철화를 착각하시는데 지금 호남고속철도는 고속철도를 따로 하고 그것은 조사비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목포까지 기존의 호남선전철화 사업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한 1조3,000억 남짓 드는 사업이고 지금 30억 조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호남고속철도는 지금 12조 정도가 추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구간을 국가고속철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선철도 위에 전기장치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權琪述委員** 그것은 호남선전철화 사업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호남선전철화 사업이 있고 호

남고속철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경부선철도가 따로 있고 경부고속철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호남 전철화 사업이 따로 있고 호남고속철도는 따로 있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당초에 부산까지 전체를 다 건설해 가지고 1시간56분에 주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2004년까지 이것을 정권이 바뀐 뒤에 중단을 시켰다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 또 호남선 복선화 이것을 2004년까지 다시 시작해서 이것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서 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남고속철도도 해야 되고 호남복선화도 해야 됩니다. 전철화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남 것을 뺀어 가지고 중단시키고 이쪽에 주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이남 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선변경이라든지 안전도 문제라든지 총사업비의 증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지매수에서부터 착공에 이르는 과정이 지금 공기가 지연되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權琪述委員** 장관님 말씀 안해도 장관님이 이번 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완공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까지 완공을 위주로 해야지 대구까지만 건설하고 이것은 중단시키고, 뒤로 미루고 또 새로 신규로 호남고속철도 다시 만들고 호남선 전철을 다시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공위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것을 영남쪽에는 투자를 안 하고 중단을 시키고 호남쪽에 투자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용지의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權琪述委員** 용지매입을 왜 안 합니까? 정부에서 안 해서 그렇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정부에서 누가 합니까?
○**權琪述委員** 정부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98년도에 1,310억원 예산 있던 것 그때부터 예산삭

감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정말 누구든지 잘 아시는 분 나와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權위원님,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가운데 200억원이 내년도로 그러면 왜 이월됩니까?

○**權琪述委員** 보상을 안 했으니까 이월이 되지요. 배정을 해가지고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서화합차원에서라도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지요. 제가 호남고속철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강아지도 자기 먹던 밥을 뺏어 가지고 이쪽 개를 주면 덤벼듭니다. 그런데 영남에 투자하던 것을 재원이 없다 그리고 이쪽 것은 중단시키고 이쪽에 신규로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하고 그쪽도 하고 다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경주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그 구간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그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난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건설교통부가 2004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2010년까지 끝마친다 하는 이 계획이 서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감정 동서화합차원으로 몰고 가시면 그것은…….

○**權琪述委員** 장관님, 보세요. 지역감정 동서화합차원으로 제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부에서 그러한 소지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어느 정부에서 그랬습니까?

○**權琪述委員** 이 정부에서 그랬지요. 9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빨리 용지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이 의지를 보여주지를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감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발전엔 엄청난…….

○**權琪述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주어야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자꾸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부각료로서 비

애를 금치 못합니다.

○**權琪述委員** 물론이예요, 본 위원도 그런 것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처장관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산배분을 합리적으로 잘해달라 이것입니다. 그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14조로 이 SOC 부분을 뭐 동결에 가까운 숫자로 지금 안을 내온 것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않고 그 예산을 빼다가 호남선에 넣었다 이것은…….

○**權琪述委員** 장관님, 자꾸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시렵니까? 그러면 재원이 없으면 호남선은 무슨 재원으로 신규로 한다 말입니까? 같은 재원을 가지고,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호남고속철도를 할 것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 모든 것을 진솔하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진솔하게 정말 정부에서 이런 재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구 이남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 용지매수를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해나가 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다른 이야기로 자꾸 바꾸어 가지고 하시면 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니, 權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전혀 순수한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마음이 언짢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權琪述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權위원님께서 논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를 ha당 5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2ha의 지급상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농업 직불제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은 국무조정실, 농림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에서 농업 기획비용, 생산적 투자재원 확충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조정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유통개혁 등에 대한 투자소요가 많은 실정이어서 소득보전적 지출인 직불제 지급단가를 시행초기부터 높은 수준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 직불제 지급상한은 재정여건이라든지 대농에 오히려 많이 지원된다는 영세농의 불만 등을 감안할 때 호당 2ha 수준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장관님 말씀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WTO협정 때문에 추곡수매가 점차적으로 수매량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도 지금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직불제는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농업예산의 20%를 직불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ha당 20만원 또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이렇게 계획을 한 것도 과거에 없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 직불제를 도입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처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한선 문제입니다.

지금 6,000평 이상은 지급을 제외한다. 그러면 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6,000평 미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계화를 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화, 규모화 확대를 정부에서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도 지금 정부의 정책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ha 이상 돼도 같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좀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좋은 제안이신데 농업 직불제 문제는 사실은 규모의 영농 그것하고

간접적인 연관은 있겠습니까마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2ha가 넘게 되면 도시농업생활자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영세농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국회와 상의해서 다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상한선 그렇게 딱 잡아놓으면 규모화가 안 됩니다. 미국도 규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다음에 농어가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까 權五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같음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SOC 투자를 2조원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무총리와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까마는 양해해주신다면 아까 羅午淵 위원님 질의라든지 여러 분 말씀하신 그 질의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전에 대정부질문할 때 본회의장에서도 장관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이 SOC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재정규모 증가에 비해서 SOC는 증가를 더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과거에.

○**權琪述委員** 예,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GDP 대비로 보면 됩니다. GDP 대비로 보았을 때 SOC투자는 최근에 와서도, 99년에 2.9에서 올해는 2.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대비하면 GDP 전망치가 577조인데 14조968억 원하면 2.59로 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IBRD의 SOC 권고투자 비율이 5%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공황을 누딜정책으로 극복했던 그러한 차원에서도 SOC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장관께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4대 개혁부문이 완수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이 붙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하게 되면 SOC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촌분야에도 많은 재정의 투입이 있을 것으로 크게 기

대를 합니다.

○**權琪述委員** 특히 SOC는 장관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이 10건입니다. 10건에 얼마나 하면 11조5,000억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6건에 5조5,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6조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끝나는 사업이 11조5,000억인데 다시 시작하는 사업은 5조5,000억밖에 안 되니까 6조의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최대한으로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一潤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은 아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난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權琪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충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말씀과 같이 98년도 추경예산 때 1,310억 삭감을 100%, 한 푼 없이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99년도 예산에도 한 푼도 안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당시 기획예산처장관 계십니까는 陳 稔 장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끝까지 떼어버렸습니다. 99년도 예산 마찬가지이고 2000년도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예산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떼어버리고 놓지 않고 죽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건교위에서 4년 동안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이 정부를 도와드리고 지금 대통령에게도 도와드리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었으면 지역차별문제가 더 나왔을 것입니다.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안 넣어왔습니다다는 이것은 꾸준히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전 답 중에 200억원이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많은 노선이 변경되고……. 많이 돈을 안 넣는 이유를 대셨는데 별 이유 없습니다. 왜냐? 감정을 이 정부가 안 했습니다. 또 쓰여져 있는 돈도 그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상당히 끝났어요. 노선변경 이야기를 했지만 노선변경은 경주통과노선에만 일부 변경했다 뿐이지 그 외에는 죽 그대로 있었어요. 하니까 이 정부의 계획대로 2004년도에 만약에 그 대로 착공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 땅을 빨

리 사기 위해서라도, 그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부지매입비 집행상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金一潤委員** 그러니까 2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이번에 감정이 12월에 일부 끝이 납니다. 만약에 끝나버리면 바로 내년 1월1일에 집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계속 넣으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래서 아까 완공위주로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權琪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까라는 예를 들어서 항만 같은 20개 어항을 신설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것을 여기저기 쪼개다 보면 파도가 와서 쳐버리면 과거에 쌓아왔던 항만시설이 전부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金一潤委員** 그런데 장관께서는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경부고속전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듣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답을 하시고 또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경부고속전철에 대해서 아까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니까 다른 말씀은 더 하자면 낱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던 고속전철을 왜 대구까지 끝내고 그 이하는 안 합니까? 본 계획을……. 진행하던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되지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아니, 그것이 말입니다.

○**金一潤委員**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權 위원도 말씀이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것이 2단계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一潤委員**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굳이 나는 그 이야기 일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하면 여기서 한번 논쟁을 벌여 볼까요? 왜 지역감정 이야기가 누가 나왔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 말을……. 감포단지 같은 것도 관광단지 다 취소해버리고 그쪽에는 대단위 해양박물관을 만들고 있지요? 또 경마장 하던 것 다 취소하려고 지금 중단해놓고 있지요. 한두 가지입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뭘 취소했어요?

○**金一潤委員** 경마장이요. 경마장……. 지금 그쪽에 하던 일을 중단해놓고 어느 쪽인지 그쪽에 가

서 지금 벌이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權琪述 위원께서 들으셨는데 그것 그렇게 접하게 듣지 마시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살펴보고 가지고 편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一潤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몇 가지 답을 해보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金一潤 위원님께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빛과 잠재부실이 어떤 경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의하셨습니까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8조원 수준으로 97년 말에 비해 4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금융정상화,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지원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과정에서 적자재정정책을 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金一潤委員 장관,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2002년도 예산, 경직성 지원성 성격인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어떠한 이 문제를 질의했을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예산, 농어촌 투자예산 전부 다 동결시키고…….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金一潤委員 예, 그쪽 분야 좀 답을 하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그것은 총리께 먼저…….

○金一潤委員 아닙니다. 총리께 물은 것은 나중에 주세요.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金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비, 교육비 등 경직성 지원성격이 큰 경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시고 2조원 이상 삭감해서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7% 이하로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직적 지원성격이 큰 경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金一潤委員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직성 경비가 금년에 가장 많이 잡혔지요? 한 61%…….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가 늘어났는데

복지비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지역의료보험 지원확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교육비의 경우도 열악한 초·중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이 법이 개정돼서 그 교부율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세출증액 소요를 포함해서 지방교부금,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필수증액 소요가 1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재정규모 증가는 6조원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一潤委員 어쨌든 긴 말씀보다는 지원 성격이 큰 경직성 비용을 줄이고 SOC 분야는 동료 위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은 고용불안을 만들어 내고 산업의 물류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SOC 분야로 늘리는 쪽으로 같이 동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대 연금과 보험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SOC 투자에 2조원 이상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연금과 의료,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은 총 2조 179억원입니다. 이중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입니다. 2조 179억 가운데 1조 9,009억원이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이는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과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5년마다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재계산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SOC 투자증액 문제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든지 재정규모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나중에 여러 가지 토의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제한된 예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潤委員** 그러니까 4대 연금과 보험은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구 시켜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이 액수가 줄어지고 효율적으로 되어지지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좀 지원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柳在珪委員**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꼭 이 시간에 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립니다. 영월댐 지역이 지난 6월13일 정부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주민이 10년 동안 경제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은 526세대에 1,820명이 됩니다.

집단반발로 해서 강원 도청을 찾아와서 집단행위를 하고 이래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요구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요구를 10월2일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미 제출한 뒤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느 부처 소관인지, 건교부소관도 되고 환경부, 행자부 이러기 때문에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관부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처가 확실히 되면 그 장관님께 협조를 요청하겠는데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처장관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부 장관이 합의를 하셔서 정책질의 끝나는 시간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총 소요액은 저희가 76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306억 중에서 3년 내지 5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영농지원시책사업, 농가주택개량, 주민생활 불편해소, 접근도로망 확충, 오지종합개발 이렇게 해서 5개 분야 306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 76억을 예산에 계상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제기만 하고 이 답변은 각 3개 장관님이 협의하셔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結** 예.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재경부장관님은 신속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裴基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一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權五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永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權琪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달성에 차질이 없으면 세수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세입예산을 증액하여 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국세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전망치보다 8.1%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8내지 9%를 토대로 한 추계액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성장에 따라서 세수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수탄성치에 의해서 세금이 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특히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등 세법 개정에는 따르는 세수감 2조7,000억원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감수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權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을 때는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97년과 98년에 경험한 것처럼 경기가 예측보다도 나빠지면 세수는 오히려 감수하는 이런 것

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여하튼 權琪述 위원님 말씀하신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특히 미수납 국제채권의 징구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세수가 더 징수된다고 전제할 때는 금년처럼 우선적으로 국제 발행규모를 줄이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琪述委員 한 개가 더 있지요. 농가부채문제…….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아까…….

○權琪述委員 상호금융관계…….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權琪述委員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그 부분만 답변 안 하셨는데요. 상호금융에 대한 정책자금과의 이자 차액 보전관계 그 문제는 아마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장관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공적자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금융중계기능이 마비되고 이것이 경기침체, 실업증가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공적자금은 수많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대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기업에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고 앞으로는 금융기관 즉,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일으킨 기업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끝까지 추적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權琪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면서 걱정을 같이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빛을 얻지 않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과의 균형문제 또 빛을 얻었더라도 정상적인 농업목적을 위해서 빛을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써서 큰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과 열심히 농사를 짓느라

고 빛을 얻어서 활용한 사람 간의 그런 형평문제도 저희가 같이 감안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성실한 농민’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의 과오로 인해서’ 하는 얘기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문제는 사실 작년도에도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법까지 개정을 하고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경부장관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고리, 사채보다 더 하지 않습니다가? 13% 물고 농민들이, 촌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 13%입니다. 그것을 정책자금 수준으로 낮추는 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대통령께서도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 500만 농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財政經濟部長官 陳 稔 알겠습니다. 성실한 농민, 성실하게 농업을 위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權琪述委員 많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될 장관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柳在珪 위원님, 서면 괜찮으세요?

○柳在珪委員 예.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러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것과 또 오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權琪述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 제가…….

○委員長代理 丁世均 예, 말씀하십시오.

○權琪述委員 지금 행정자치부장관님 지금 안 계시네요? 차관님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신문에 ‘새주민증 전면교체 불가피’ 하고 이렇게 1면 톱으로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새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부인네들이 보통 쓰는 아세톤이 묻으면 그 글자가 지워져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뒷면의 지문을 찍은 자리도 아세톤으로 지워버리면 지워지고 다시 다른 사람 지문을 찍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조·변조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았지요?

○**行政自治部企劃管理室長 金範鎰** 예.

○**權琪述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전면적인 재경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이 사전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권 위원님, 부별심의 때 하시지요.

○**權琪述委員** 부별심의가 아니지요. 이것은 부별심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것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權琪述委員** 당장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行政自治部企劃管理室長 金範鎰** 준비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렇게 하세요.

○**權琪述委員** 준비해 가지고 그러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行政自治部企劃管理室長 金範鎰** 예, 알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代理 丁世均** 행자부에서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9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宋錫贊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대전 유성 출신 宋錫贊 위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10%만 지지해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야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19세기 이조 말엽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을 차단하고 개방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업화의 물결을 차단하고 근대화를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열강들의 싸움터로 변해 결국 일제 36년의 치욕적인 식민지 생활을 했고, 20세기 말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현대판 식민지라 할 수 있는 IMF의 한파를 만나 온 국민이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산산조각이 나 쓰러지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파산되었으며 기업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200만명 가까운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며 역전 대합실이나 지하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러져 가는 기업과 파산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이미 1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4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혁명은 목숨을 건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개혁은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동참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청와대중심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튼튼한 토대가 없는 허공 속에 메아리치는 개혁이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는 하지만 썩은 쓰레기가 겹겹이 쌓인 개울에 맑은 물만 흘러내려 보낸다고 그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개혁은 청와대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장관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개혁, 객석에서 박수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개혁, 과거청산의 개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개혁,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몸 사리는 개혁이 아니라 신명나는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세계 속의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기보다는 고통과 아픔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정치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은 것은 현행 대통령단임제에서 비롯되지 않으나 생각해 봅니다. 현행 대통령단임제는 지난 87년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이제 민주화를 이루었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운 만큼 단임제의 임무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난국을 풀고 책임정치와 여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책임이 확보되는 대통령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 깊은 동서 간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후계자 양성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후반의 권력누수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통령제 도입도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을 조선노동당 제2중대라고 하고 며칠전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金正日을 위한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으로서는 암담했던 군사정권시절의 악몽을 다시 꿈꾸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햇볕정책으로 남북은 긴장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으며 상호 교류의 확대와 함께 자주적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공존·공영

의 최대장애물로 등장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지난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탄압도구로 악용되어 수많은 양심적인 인사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습니다. 이에 UN 국제인권위원회 등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대신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환경분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 정부의 재정규모는 2000년 본예산에 비해 9%가 증가하였고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6.4%가 증가한 101조3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해 예산규모가 결정된 배경은 금년 8월, 9월 예산안 확정 당시에 2001년도 경제성장률을 9%로 예상하고 소비와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금융의 경색과 소비위축이 뚜렷해 지면서 국가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10·13부실기업퇴출과 공적자금 추가요인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의 차질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 거시경제지표의 달성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 상태라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9% 정도에서 5% 내지 6%로 급격히 저하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금년도 2.5% 수준에서 4.3%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년도 경제상황이 본 위원이 언급한 예상대로라면 새해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총세입의 72%를 구성하고 있는 내국세 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세입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21세기는 과학기술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산업화 시대를 가진 선

진제국에 비해 우리의 경우 겨우 30년 정도의 연륜으로 세계가 놀랄 만한 산업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오늘날 산업과 과학기술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과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부 새해예산안 증가율은 14.4%로 전체 정부예산의 증가율 9%를 상회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과학기술부분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분 투자는 연구개발 기술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후생복지부분의 투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규모 9,939억원 중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후생복지시설부분의 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며 20년간 한국 과학을 이끌어온 대덕연구단지는 건강관리와 문화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센터 하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연구인력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실질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며 연구인력의 유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연구단지의 고급인력들이 외국이나 타 직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시에는 과학기술입국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지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됨은 물론 우리의 과학미래 역시 불투명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연구의 기반 확충과 함께 연구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부분의 지원확대로 연구단지의 연구분위기 쇄신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연구원 및 그 가족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

제는 단지 내 일반고등학교의 수급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구단지 내 5개 고등학교 중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4개 특수고교가 있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대덕구 하나가 유일할 뿐입니다. 따라서 한 해 입학생이 408명에 불과한 대덕구만으로는 단지 내 4개 중학교에서 매년 졸업하는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한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단지의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예산처장관과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진입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부 생활권에서 연구원들이 출퇴근 시 병목현상이 발생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대덕연구단지 진입로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가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성난 농민단체회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2월7일 또 다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가부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지경으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15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구조조정비용의 일부를 파산위기에 직면한 농어민지원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실패에 대해서 경제논리를 초월한 특단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농어민의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또 농어촌 파탄위기를 타개할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농촌을 살려야만 앞으로 전개될 국제식량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한 농어민부채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은 2년 거치 5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무자가 부

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이 대신 상환하여야 할 경우 정부가 전액 상환해 주든지 아니면 이자만이라도 정부가 부담하고 그 원금에 대해서는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치제 부활 이후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악화요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총액은 2조 1,000억원인데 이는 99년도 지방세 수입총액 18조 5,000억원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유성의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액은 표준지가의 과세표준에 의한 세액산출결과 총면적 70.9km²로 국방부가 154억원, 대전시가 38억원 등 총 76개 기관에 233억원이고 재산세 비과세액은 60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전 유성구의 지방세 수입액의 207%에 달하는 수치로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비과세감면액 46억원보다 5배가 많습니다. 실제 인근 표준지가를 적용해 과세액을 산출하면 현재보다 몇 배나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입 손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전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관련법규를 폐지시켜 과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운대 군인체육시설 확충방안, 그린벨트 관련문제는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申榮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申榮國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일 자정을 넘나들며 행정부와 국회가 이마를 맞대고 나라 걱정을 하는 것에 저희 회관사무실로 많은 국민들이 고맙다고 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자신도 자정을 넘어

서 집에 들어가면서 가족들 보기에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늦게까지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12월3일이 3년 전의 잊지 못할 IMF프로그램의 3년 프로그램을 마치는 날입니다. 바람직하지 않게도 오늘 아침 신문이라든가 오늘의 현주소를 보면 주가도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도 동반폭락을 하고 또한 신문에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들이 과거보다는 아주 잦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흡사 3년 전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문경하고 예천입니다. 가보면 산골짜기에 있는데 자동차도 없고 그런데도 전화 한 통, 119 전화를 돌리면 금방 와서 환자도 실어가고 사고 난 것도 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저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나라에서 아픈 환자를 119 구급차로 신고 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는 산불방지가 가장 지역의 큰 일입니다. 공직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도 서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아주 민첩하게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쫓아옵니다. 어떨 때 보면 그 지역의 동네사람은 자기 논밭 같고 과수 따고 있고 불이 났는데도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군청 또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쫓아와서 산불을 끄는 것을 보고 아, 저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름에는 수해가 자주 납니다. 수해가 자주 나면 천방이 터지고, 농수로가 다 터지고, 벼가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또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군인이 와서 주인이 있는 논에 나락을 세우고 천방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고마워 가지고 저보고 위원님 제가 농사 지으면 가을에 쌀 한 가마를 시청에 갖다 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정부의 역할이고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데서 싹트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책임을 지고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4대 개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금융개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무슨 은행, 무슨 금고, 무슨 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기사가 라디오 뉴스만 들으면 맨날 은행사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 빠져서 운전대에 앉지를 못하겠다고 이런 것, 이것 누가 잘못해서 이러는가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과연 은행의 종사원, 은행의 지점장이나 은행장이나 은행의 임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함께 하고 있는 우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왜, 나라가 있었으면 은행을 지키고 예금을 지키고 은행이 잘못되면 공적자금으로 또 메워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모른 것도 잘못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줄줄 새게 놔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기업구조조정도 봅시다. 대우자동차하고 삼성자동차하고 빅딜을 하라고, 만약에 삼성하고 대우가 빅딜이 됐더라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얼마나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우가 굶아 터진 것을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았으면서도 삼성자동차하고 빅딜하라고 한 그것도 잘못이고 또 그것을 1년 동안이나 끌어 가지고서 굶은 상처가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것 전부 공적자금으로 다…….

현대, 현대가 허약하다는 것 이미 정부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허약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서 정부가 거꾸로 현대에다가 코를 꿰어 가지고 다른 기업 같았으면 벌써 퇴출시켰을텐데 이 형제, 저 형제 불리다가 법을 왔다갔다 넘나들면서 구걸해 가면서 현대를 문닫게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잘못했는데 대우의 金宇中 씨가 잘못했습니까? 현대의 鄭周永 씨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사기업이 아니었어요. 잘 되면 자기 것이고 못 되면 나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 공직자들, 알았으면서도 나서지 못한 점 이제 와 가지고서 100조, 50조 갖다가 1년 예산 100조 또 금년 어제, 그저께 40조 갖다 막으니 어느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산불을 끄고 수해를 방지하고 인명 구조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대우가 그러기 전에 미리 알아서 손을 쓰고 현대가 그러기 전에 미리 알아서 손을 쓰고 은행을 좀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했다라면 공적자금 이렇게 150조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1인당 공적자금 몇 억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또 공공부문 봅시다.

3만9,000명을 감축했어요. 이런 산수가 어디 있습니까? 3만9,000명을 감축한 것은 25%를 감축했는데 네 명 중에 한 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25%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오히려 감축하기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런 사태가, 이런 것을 신문에서 읽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또 감축을 하면서 1년 후에 다시 넣어줄게 아니면 자네 아들을 다시 넣어 줄게 이런 식으로 속이는 방법, 적자기업이 승진을 한다든지 퇴직금 누진제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도 상당부분 퇴직금누진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국민들이…….

다음 노동부문, 이와 같이 위에서 잘못해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노동자들이라든지 이익단체가 빨간 띠 안 두르고 있으면 이상하지요. 빨간 띠 두르는 것은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잠에서 깨라고 그런 시위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없었지 않느냐 총리,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검찰, 감독원 부문별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답변하고 내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토막토막 말아 가지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안 계십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늘에 계시는, 구름 위에 계시는 대통령이 즉각 땅에 내려와서 다리 걷고 눈에 들어 가야 됩니다.

눈에 들어가서 술선수범해서 첫째 그동안 잘못된 점 대통령께서 솔직히 국민에게 잘못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왜 국민에게 호소 못합니까? 대통령이 몸으로 부딪쳐서 국민을 상대해서 앞으로 잘못했으니,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호소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산도 마음과 같아서, 욕심 같아서 동결해서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자.

그러한 현재까지 무능한, 자기책임 다 못하는 사람 깨끗하게 좀 멀리 하시고 폭넓게 유능한 사람

말굴해 가지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호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대통령이 앞에 나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사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더 시간 되겠습니까?

○委員長 張在植 그러세요.

○申榮國委員 다음은 대북관계, 우리 통일부장관 계십니다마는 제가 13대 때 10년 전에 러시아가 가라앉을 적에 우리나라에서 30억불 차관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13대 경과위원이었는데 부총리 보고서 그 30억불 차관 주지 마시오, 조급하게 생각 안 하면 저절로 그 나라 우리하고 한·러수교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저 북방정책 하고 좀 생색내려고 조급하게 하니깐 30억불 주는데 가만 놔두어도 저절로 한·러수교 한 6개월만, 1년만 지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운 돈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불 날렸지요? 그와 어찌면 좀 흡사하게 되는 이 북한관계도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개방을 하든지 또 개방을 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 대북관계도 조급함 없이 좀 느긋하게 하면 우리가 무리 안하고도 좋은 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얼마 전 신문에 보면 黃長燁씨가 성명서 한번 발표하니깐 그 다음날 ‘방 빼! 나가!’ 나라 일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방 빼는 것도 저 사람이 하니깐 뭐 국정원에서 결재 말자면 그래도 하루 이틀 걸릴텐데 석간신문 보고 아침에 보니까 ‘방 빼! 나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물론 방을 빼라고 하고 직장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 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해야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성명서 한번 냈다고 당장 내일 아침에 ‘방 빼! 안기부에서 나가!’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이…….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하고 신문 보셨지요?

張忠植 총재, 대단히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남자가 어젯밤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그 머쓱한 모습, 이게, 이게 오늘날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어찌해서 적십자사 총재가 일본을 갔다가 오늘

귀국하는 장면이, 그런 머쓱한 모습으로 또 북한단장이 張 총재 보고 ‘몰골이 가련하다’,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습니까? 북한단장으로 하여금 ‘몰골이 가련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적십자사 총재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몰골이 가련하다 소리 들어도 통일부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아무 혐의했다든가 그런 것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또 요새 신문 보면 겁이 나요. 그저 은행 터진 얘기하고 또 밑에는 맨날 이북에 창피 당하는 일만 나오고 이게 뭐니까? 어제 여당위원 말씀마따나 무슨 연속극이나 나옴직한 동진호 갑판장, 70 노인을 이북에 모시고 갔다가 또 와서 기자회견 하는데 납치해 가지고 저, 강화도 다리 끝에다가 집어던져 놓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좀 잘해 보자는 그런 것으로 알아들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장관, 어느 장관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아마 통일부장관하고 총리가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한나라당 인천 연수 출신 黃祐呂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편성은 국가경영의 반증이요, 국가정책의 계수적 표현입니다. 한 국가의 투철한 국가의 경영철학을 모색하여 현명한 국가정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원활한 국가경영과 국가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경영의 기본틀, 기본철학은 무엇인지 국가는 예산편성에 앞서 분명히 밝히고 예산이 이에 따라 조화되게 편성되었는지를 국민 앞에 알리고 검토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정운영 과정은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인한 실제적인 작업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합니다. 종래의 권위주의적인 성장주도형의 패러다임은 극복되어야 하고 쇠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도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실험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정부도 IMF의 권유에 따라 실험장으로 다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저로 비시장적 요소를 제거하는 구조조정과 4대 개혁을 촉진하는 현정부의 국가경영은 시장경제질서, 유연한 노동시장, 공기업의 민영화,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잘못하면 80년대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여 제조업과 금융시장은 송두리째 외국인의 독무대로 되어 마치 워블던 경기장과 같아지고 복지지출의 과부하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나빠질 우려가 높습니다. 급기야 영국은 1992년 그토록 강조하던 통화안정은 2일만에 무너져 파운드의 방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요컨대 이 나라의 국가경영의 기본철학은 무엇인지, DJ노믹스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른바 신자유주의인지 아니면 한국적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제3의 입장인지, 최근 비판이 가해지는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판은 무엇인지, 한국경제에 아직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IMF가 권고하는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재경부장관께서 국민앞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팔구월에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경제성장을 8 내지 9%로 예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陳 稔 재경부장관 자신께서는 한국경제는 내년에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상반기에는 4%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유가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4%의 경착륙을 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예측도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하고 있는 데 우리는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로 제2의 위기가 올 경우를 대비하는 비상적기대응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나친 낙관적인 전제 아래 방만한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에 기인한 긴축예산으로 위

험을 대비하는 쪽을 택하다가 여건이 좋아질 때 추후에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이 원칙적이고 안전한 태도일 것입니다. 재경부장관의 견해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위기관리체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적자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경기부양책을 써서 세수를 늘리거나 국가채무나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긴축재정을 강행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는 일입니다. 어느 수단을 택할 것입니까?

또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일률적인 삭감을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우선순위는 국방예산·교육예산·복지예산 그밖에 어느 예산인지 재경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작년예산 대비 6.3%의 팽창예산이라고 정부는 발표하였습시다라는 본예산 대비하면 9.3%의 예산팽창으로서 정부의 경제성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으므로 재정안정을 추구한다는 기본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건전성은 추경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 경제성장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기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작년예산 대비 4%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인건비·행정비·방위비·지방교부금에서 철저히 축소하고, 예비비의 축소는 물론 특별교부금의 율을 조정하고, 지방국고보조금 중에 지방교부금 증가분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SOC의 삭감과 공적자금의 축소, 국채이자의 축소, 연금보조의 축소, 선심성 사회복지비와 남북협력기금의 삭감, 숨겨진 각종 예산을 드러내서 축소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연례행사로 추진된 추가경정예산을 올해에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감지수는 정부의 전망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로 나타나는 실물경기는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자금 경색으로 대단히 어둡게 시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감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생산 저하, 소비 저하가 발생하고 실제로 다음 경제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체감경기 관리방안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단기 원인인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거시경제지표도 회복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당시까지는 재정의 건전성과 실물경제가 뒷받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새로운 동남아시아와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금융과 외환의 불안정성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미 금융정책은 자유화 과정으로 더 이상 정부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직 재정정책만이 정부의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최대목표는 제2경제위기의 재발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론을 전제로 만반의 대비를 하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고 밖에서 오는 도전을 안에서 방비하는, 이겨 나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재경부장관은 위기관리체계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위기관리체계의 전제로는 튼튼한 재정기반이 필요하고 뒷받침되는 실물경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재정은 부채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공적 자금의 중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주요 사기업의 태반을 외국자본에 매각한 후입니다. 더 이상 매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재원은 외환보유고입니다마는 이도 과도한 외채에 비해 넉넉하지 못한 액수입니다.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와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저실업률과 시장수요의 유지를 이루어왔는데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본격적인 부실정리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 부실과 부패구조의 온존과 국제 경쟁력의 담보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위기관리체계의 가용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재경부장관께서 국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재정수단의 활용도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의 촉진과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적 자원분배 보장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사전 배분의 교부금은 전년 대비 37.2%, 9조6,000억원이 증가한 35조4,600억원으로서 2001년 예산안의 37.4%에 달하고 국세 수입의 41.2%에 달하는데 이 자금은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없이 총액규모로 지방정부에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투자의 효율성이나 집행과정의 성과 향상을 판단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지방재정의 비상시국가의 재정계획에 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재경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적 IMF 정책기조에서는 금융위주의 산업 편성으로 타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도 반도체와 통신기와 같은 IT산업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전통적인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이 건설 건축과 같은 이 나라의 기간산업은 무너지고 있고 부품산업과 같은 숙제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이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대 지주인 건축 건설과 자동차산업은 심한 불황과 도산의 위협 아래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대량실업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을 위시하여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이르기까지 IT 첨단 기술주의 수익증가율이 전통주 굴뚝주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과잉기대와 환상이 주가에 실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IT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아 현재 IT산업의 위축은 즉각 경기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육성책에서 과당경쟁으로 도산일로에 있는 건설, 건축법의 정비 육성 과 굴뚝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재건을 위하여 정부가 구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교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무엇보다도 건설하게 건축되어야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적 감각을 고양하고 최고의 문화적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개성을 지닌 미래에 대한 꿈이 담긴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하나하나를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심정으로 건축하여 후세교육에 헌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당대 최고의 설계자들로부터 학교의 건축설계도를 제공받아서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학교 건물을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부장관의 답

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학교건축은 건축수요가 빈약한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실업대책의 하나라는 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6%에서 4%에 달하는 실업률로 1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현안 중의 현안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의 유연성 확보로 양산되는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업대책을 세웠으나 이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30년대식 뉴딜 실업대책에 비중이 주어졌고 중소기업 지원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취업 훈련과 같은 최선의 조치는 부족하였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나라의 일자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도 내국인의 절대적인 3D업종 회피현상으로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노동력의 제공처로만 파악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키는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인간에 대한 죄악입니다.

미국의 흑인문제, 독일의 터키인문제와 같이 후일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름으로써 종족갈등이나 문화의 동질성 파괴와 같은 심대한 국내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계와 달라서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남게 되고 반드시 이질적인 문화를 만들어 이 땅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채택하려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각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이들의 한국체류로 인한 문화적 갈등의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제현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2080사회라는 말이 있답니다. 잘 사는 20%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80%는 더 못 산다는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2/4분기에 최상위계층 20%의 소득이 최하위계층 20% 소득의 5.28배로 99년의 4.49배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동대문시장의 가을 매출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20%인 데 비해서 외

제 고가품의 매출은 2000년 하반기에 30%에서 20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서는 이러한 사회적 괴리를 匡正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구조가 조심스럽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상징이요 투자의 현장인 주식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 주식투자를 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5%로 그 중의 79.4%가 주식투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육성에 실패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붕괴요 자본의 흐름을 막고 자본의 재투자의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실히 일하여 저축한 결과로 얻은 자본은 주식으로 생산시장에 재투자되어야 하고 이로써 중산층은 자본주의의 결실을 공동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 육성의 기초인 주식시장의 재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울러 외화유출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 시행 이래 98년4월부터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는데 그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辛基南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委員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심야에 국정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게 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복지국가, 문화국가라는 말을 부쩍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이나 복지의 수준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성급하게 제가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형편에 비교해 볼 때 마땅히 어느 정도는 가야만 하겠다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이지요.

짧은 시일에 경제발전에 주력하다 보니까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답게 사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예산투입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없는 정책은 허구입니다. 정책의 비중은 예산투입액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국가나 문화국가나 하는 이런 표어, 이것은 적어도 복지예산이나 문화예산의 비율이,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중의 비율, GDP 중의 비율이 선진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깔보기 쉬운 중진국 수준만큼이라도 되어야만 그런 복지국가, 문화국가 이런 표어를 내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지국가, 문화국가는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침 기획예산처장관이 계신 김에 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을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좀처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사회분야 질문할 때는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회분야야말로 예산이 중요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중한데 거기는 안 나오시는 게 상당히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맨 사회관계 장관들하고만 얘기해 봐야 예산이 없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오늘 여쭙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요즘 시급한 문제가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2004년까지는 모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몰제로 해서…… 그런데 갑자기 2001년, 내년까지만 모으고 내후년부터는 안 된다, 폐지한다 이런 방침이 발표가 되었는데 폐지를 3년 앞당기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 재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산이라는 게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고 기다리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산으로 이제 이걸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 폐지 후에 지금 문예진흥기금 적립액 목표액이 4,500억입니다. 2004년까지 4,500억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3,600억입니다. 이제 900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국고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으니깐 이것 국고충당이 아니라 뉴서울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물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애초의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목표액을 국고 충당하는 것을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田允結 지금 말씀드릴까요?

○辛基南委員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요.

문화기금을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가 이런 소식을 듣고 야, 이것 그나마 이 침체기에 문화예술계에 자금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 상당히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산상의 사기진작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는데요.

구조조정의 문제입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되고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해서 더 많은 인내와 고통이 요구되겠는데요.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의 비전과 그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한편 발목을 잡는 집단이기주의에도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점검·평가할 전담기구로 가칭 구조조정추진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전담기구, 지금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비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은 제가 총리에게도 묻고 그리고 장관에게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 180만 명 가깝던 실업자가 최근에 80만 명까지 하락해서 이제 실업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했는데 최근 많은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가지고 아마 내년 한 2월경에는 실업자 수가 피크에 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실업대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마는 저는 그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그런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고용보험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사회안전망도 우리가 이미 이럴 때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그 어려운 과정에도 구축하느라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종의 응급조치인데 공공근로사업도 중요합니다. 일시방편으로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효과를 봤어요.

이것을 이제 내년에 대폭 줄이겠다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한 6,000억 정도로 줄이고, 그런데 그래서 되겠는가. 지금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36만 명 규모를 유지했고 실업률이 3.6%에 불과했던 3/4분기에도 26만 명 규모를 유지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예산 6,000억 가지고서는 분기별로 7만 명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기존 공공근로 참가자 중에 30%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최대 실업자 수를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한 96만 이렇게 추산하신다는 말도 들었는데 노동연구원이 추산하면 최소한 110만은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실업자 증가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 있고 이것에 대한 내년의 예산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이것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수립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이것은 새로운 시대적 하나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주력하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산적 복지는 어려운 이들에게 무조건 베푸는 시혜성의 소비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지만 적극적인 자활유도를 통해서 취업, 창업

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은 성장위주, 재정적자 관리에만 중점을 뒀고 사회보장분야의 재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재정, 이것은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분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회보장예산을 보다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비율은 6.8%입니다. 이걸 OECD 가입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나쁘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진국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스웨덴, 프랑스 이런 유럽국가들은 30%대니까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굳이 비슷하다면 터키 정도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터키수준의 사회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의 2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수준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서 사회보장분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ISSA 사회보장 국가별 종합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2개국 중 130위입니다. 이것은 멕시코, 터키 또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북한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150위입니다. 랭킹 매기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보장 실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총리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이 현 수준에서 적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별심사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교보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그보다 지역건강보험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 3,283억 적자 봤고 금년에도 5,400억 적자가 예상되고요. 이것 곧 파산지경에, 금년 내로 아마 고갈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건강보험 수입이 보험료하고 국고지원 두 가지로 하는데 보험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큼니다. 물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선정한다든지 징수율을 제고한다든지 운영을 효율화한다든지 지출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도 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해서 국가재정의 지원·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정부는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분담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방치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정부가 그런 약속을 지켜야만 국민에게도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8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에게 지역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난을 물으니 총리께서 재정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보니까 국고지원 액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비율은 30% 선으로 비슷한 현상유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다가 약 2,141억원을 증액시켜서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수가를 원가의 90% 수준으로 맞추도록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뻔히 예상되는 비용으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수가 인상문제가 있고 또 결손율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 일이 뻔히 보이는데요.

총리께 묻습니다.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0%인 국고지원율을 2002년까지 최소한 40%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새천년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나 노조 등이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주장하는 수준인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예산을 최소한 3% 확보하여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朴世煥委員 한나라당 朴世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국방안보 분야 정책질의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일·외교부문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금년 1,000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5,0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는 자금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조성이 거의 대부분 99%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사업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금사업으로 계상함으로써 국회예산심의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과 함께 남한 내에서도 결식아동, 저소득층, 기타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대상이 많은데, 사업목적도 지정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의 동 기금 집행상황을 보면 정부가 흔히 말하는 상호주의도 잘 지켜지지 않은 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도 기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거나, 출연금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해서서 역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초부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금년 대비 6.4%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고 있는 것 외에 연도 중에 추가로 처우개선 재원을 예비비로 2,000억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재정형편상 예산의 추가부담과 함께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는 폐해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무원 수의 감축 등 작은 정부를 지

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지급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실제 운용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지급제도의 시행을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예산처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이외에 KEDO 분담금 등 대북지원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미 미사일 교섭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대북 경비부담이 추가로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교부는 국방부와 함께 경의선 복원사업 중 남측 구간 철도복구와 문산-개성 간 도로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급히 추진되고 있는데 공사의 예산이 건교부 예산이 아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건교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고 동 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는 사업인 만큼 철도 복원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완공목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치안예산은 일선 관서의 근무여건 및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질서의 불안이 가중되어 국민의 고통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격렬한 노동운동과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제몫 챙기기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나 사회질서 유지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파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치안유지와 국가 기강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는 그동안 추구해온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권의 선심공약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와 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내년도 치안대책과 노동쟁의 등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행정자치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張忠植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일본방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였으나 통일부장관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張忠植 총재는 2차 이산가족 상봉 하루 전인 11월29일에 석연찮게 일본을 방문하였다가 귀국하였습니다마는 설사 외유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기간 전에 귀국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상봉직전 출국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북측의 부당한 주장에 현정부가 굴복하여 강제출국시켰다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현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張 총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으로 출국시켰다면 이는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전 그 귀중한 시간에 張 총재가 일본을 방문한 목적과 방일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그리고 방일을 추진하고 결심한 책임자 또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 시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십시오. 남북회담으로 우리 쪽 군인만 정신무장이 해제된다면 큰일입니다. 이북은 그대로, 아니, 더욱더 군사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마저 호물호물한다면 왜 군대에 젊은 사람이 가야 합니까? 정치는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군은 똑바로 해서 통일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한 시민이 보낸 편지요지입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튼튼한 안보에 대한 현정부의 준비태세에 깊은 실망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남조선 해군함정이 14일에 백령도 북측 영해를 깊숙히 침입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며칠 동안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측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경비정이 14일09시08분경에 월

래도 부근에서 바다의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다가 09시43분에 북방한계선을 이탈 북상 복귀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이 아축 영해를 35분 동안이나 침범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7일 국방 상임위에서 이 같은 북한의 영해침범 사실을 밝히자 국방부장관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11월 14일 당일 예하부대로부터 상황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상에선 정확한 위치 식별이 어렵고, 우발적인 월선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결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연평해전도 북한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는 현정부와 국방부의 태도는 우리 국방안보의 현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사실을 국방부가 예하부대가 아닌 야당의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 위원은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연평해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을 하였는데도 군의 최고 지휘부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올해 들어 서해안 북방한계선을 15번이나 침범하였습니다. 이 15건 중에서 6·15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방한계선 침범은 7건이 됩니다.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라고 단언하였지만, 북한은 NLL무력화를 위해 계속 서해 영해를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해는 북한 잠수함의 운동장이 되어 버렸고, 서해는 북한경비정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대북 군사태세를 시험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일관되고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상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월경으로 평가절하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잦은 NLL침범 목적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LL침범은 엄연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므로 군사정전위나 한미연합사, 합참에도 보고되어야 하며 북한에 즉각 항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금년 들어 북한의 서해영해침범에 대해 몇 번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북한이 금년도에만 서해안 영해를 15번이나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현정부나 국방부의 항의성명 하나 발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항의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부와 국방부는 왜 북한의 영해침범을 당당히 밝히지 못했으며 또한 아직까지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북한이 억지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그리고 지난 28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적반하장격으로 북한 대표가 아군이 영해침범을 했다고 억지주장을 하였는데 왜 우리 대표는 항의조차 못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까? 국방부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실무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구결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정부가 북한의 서해5도 통항질서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 간에 충분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부지역 DMZ 내의 지뢰 제거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북한의 서부지역 주력부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평양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먼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의 위협과 평양의 위협은 다릅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은 다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에게 서부지역에 집결된 북한의 전차나 기계화 부대를, 또 이와 같은 주력부대를 후방으로 배치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복원공사기간이라든가 그 전후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태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반도 대북 감시태세를 증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대화는 남북대화이고 군 본연의 임무는 별개인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명제를 상기하면서 안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

어야 합니다. 안보의 최후보루인 우리 군이 정치적 시류에 흔들린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은 대북 안보정책만은 과거 서독의 대동독 정책과 같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根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鎭委員 고양시 덕양구의 李根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한전 구조조정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 노사가 전면과업철회, 민영화 구조조정 수용을 극적으로 합의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같은 극적인 대타협 위에 임금인상 등 노사 간의 이면계약이 있다는 사실이 불거져 커다란 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사정 사이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답안으로까지 평가되었던 한국전력 노사합의에 이면계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의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국가경제를 몰모로한 자기뭇 챙기기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참된 구조조정이 아니라 겉치레 구조조정에 불과하며 차후 한전 민영화나 경영혁신에 큰 장애가 되고 방만한 경영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공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어떻게 이면계약을 추진할 발상을 했는지 본 위원은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면계약에 대한 의혹이 대체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면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는 국가 최대 현안인 공기

업 구조조정 작업의 차원에서나 또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노사 간의 차원에서나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할 공기업의 책무 면에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면계약은 원칙적으로 파기되어야 하고 그 진상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계서는 이면계약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면 노사 간의 계약 자체를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 어디 가셨습니까?

○産業資源部次官 吳盈教 차관이 있습니다.

○李根鎭委員 기획예산처장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處長官 田允喆 지금 李根鎭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이면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도미노현상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다만 한전사장과 노조 사이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장제를 앞으로 분할과 민영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런 합의사항은 있었지만 별도의 이면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根鎭委員 만약에 이런 이면계약이 있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의명분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설사 하룻밤 전기가 나가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면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해야만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이면계약은 이미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만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전 노사의 이면계약 의혹은 양측의 도덕성 문제 수준을 넘어서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일시에 떨어뜨려서 경제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가 시급히 진상을 밝히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세워서 구조조정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과 산

업자원부장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산하 연구원 소관부처 환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96년에 착수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43개 정부 산하 연구원들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총리실 산하로 통합·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만한 연구원을 통합 운영하고 정부부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연구성과의 질적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총리실은 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연구회 등 5개의 분야별 연구회를 만들고 연구회 장관급 상임이사장 밑에 10여 명씩의 상근 공직자를 배치해서 연구원에 대한 감독·평가 업무를 맡겼으며 이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최근 규제개혁조정관 산하에 연구지원심의관과 2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예산문제를 살펴보면 연구원의 연구비는 해당부처에, 운영비는 연구회에 각각 따로 로비를 벌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종래에는 해당부처만을 상전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연구회와 연구지원심의관실을 더한 세 개의 지휘계통 아래서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는 옥상옥의 감독체계를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연구성과의 질적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는 총리실에 전체 연구기관들을 그대로 통합·이관함으로써 옥상옥을 설치, 쓸데없는 간섭으로부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친부모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자녀들을 공연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큰아버지 덕에 양자로 가서 이리 밀리고 저리 차이는 상태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실패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업무가 중복된 연구원들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한 후 각각 연구원들을 전문성을 가진 소관부처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94년 운영중인 산업연수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후발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서 그 해결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고용허가제가 이상적인 제도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전이되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용허가제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에 따른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개의 중소기업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 인력에 비해서 국내 주택, 교통, 환경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은 물론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 근로자 등과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경우 안정되어가는 노사관계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신축성이 축소되고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산업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인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기회를 가진 후에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산업자원부장관과 병무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 8년 경과 졸업제문제와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

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일부를 병역의무의 대체 복무형태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기능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증소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진흥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산업진흥요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은 매년 늘어나면서 병무청에서는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후 8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중지하는 졸업제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99년12월 병무심의위원회에서 2001년1월부터 동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역지정업체 지정 후 8년이 경과한 업체의 경우 기술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 산업기능인력요원신청업체 20%에 해당하는 1,400업체가 8년 경과업체로 추정이 되면서 지난 10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능인력 활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계속 현역인원 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90.4%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전체 기능요원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8년 경과업체에 대한 병역지정업체졸업제 도입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수출실적이 사오십% 이상 되는 중소 유망수출업체에 한해서 병역특례업체로 재지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에 다소라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병무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타운의 실증 시범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적정 암연구비 1,700억원인데 겨우 40억원만 책정해서 연구개발비 수준인 150억원을 책정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鍾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委員 대구 달서갑구 출신 한나라당의 朴鍾根 위원입니다.

정부의 내각은 경제가 위기상황에 와있고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4대부문 구조조정을 주축으로 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IMF를 극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16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막대한 재정적자 그리고 수백조의 국가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국가재원을 동원하고서도 추진해 왔던 개혁의 성과는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와중에서 개미군단으로 표현되는 국민 대다수의 증시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전망한 8 내지 9%가 아니라 4 내지 5%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도 위협을 받아 제2의 IMF가 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내각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와 관계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자금 투입과 추가적 소요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40조의 공적자금을 받아 감으로써 160조 규모의 국가재원을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큰소리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계획대로 잘 지켜지기를 바라마지 않습

니다. 그리고 꼭 지켜내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내각은 이에 대한 결의와 각오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상시적 퇴출제도의 정착으로 부실의 대형화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1년에 20.7%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 19.5%보다 불과 3년만에 1.2%포인트가 높아졌으며 내년의 국세수입은 25%나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의 세수불합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사회보장성 각종 연기금의 기여금과 보험료로 2001년에 25조5,000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GDP비율 약 5%에 해당되어 사실상 국민부담률은 25.7%에 달하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국민에게 과연 지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경제적 불안요인이 많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부담을 급증시키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대 연기금 등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연금에서만 내년에 10조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의료보험에서 2조 이상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재정에서 2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실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정책의 많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새로운 장기적 수지전망을 국민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부담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의한 재원조달의 규모범위 이내에서 사회보장 지출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적자평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가 GDP대비 1%에 불과하고 또한 장기재정 전망에 의하면 2003년에 재정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자가 큰 문제 없이 잘 수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어 이의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예산은 예산외의 적자요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자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은 국채의 변형된 모양이며 통합재정수지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금·공기업·지방정부의 부채와 적자를 포함한다면 국가의 재정적자는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하겠습니다. 그나마 계수적으로 마이너스 1% 범위내로 나타난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10조가 내년에 징수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재원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재정적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2003년에 균형예산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공적자금 상환규모만 하더라도 9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2003년까지 6%의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비를 통한 여러 가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4대 연기금 부실증대 등을 고려할 때 균형예산의 목표가 대단히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씬씀이를 절약하여 재정적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경제홍보를 강화하여 경제위기의 실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잘못된 발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은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한되는 예산심의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또 그 시정책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국가부채의 급증, 사회보장정책의 정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된 오늘의 우리나라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의 변경이 필

요하고 따라서 예산의 구조적 변경과 관리체제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에서 예산편제의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예산의 사전심의가 배제되어 있는 부분을 점차 줄여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권 밖에 있는 부분은 결산의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사전심의와 사후평가 체제를 다시 잘 갖추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기획예산처장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 되므로써 상반기 결산 심의, 하반기 예산심의 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성과주의 예산평가가 이루어지고 동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C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IMF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고비용·저효율 경제라고 자평해 왔습니다. 고비용으로는 고임금·고금리·고물류비용을 들었습니다.

고임금과 고금리 문제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물류비용의 해결은 SOC투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물류비용의 추세를 대 GDP 비율로 살펴보면 88년의 13.7%에서 연년이 증가하여 98년도에는 1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OC투자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합니다. SOC 투자가 계속 되고 있고 SOC 투자가 적지 않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SOC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물류비용을 내리기 위한 건설교통부로서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SOC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재벌·대기업,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고 중소기업과 농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오래입니다. 또한 농업부문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농업투자계획이 수익성이 첫째 없습니다. 또 농업이 독자생존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게 되어있는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농림부의 확실한 비전이 나와야지만 농민의 부채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농업의 획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예산상으로는 약 1조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유지 대책과 농업부채에 대하여 농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정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방경제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중개발, 지역별 편중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지역별 배분을 증대시키고 지역별 차별지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SOC 투자, 지하철 투자,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인터넷 광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두루넷, 한전, 하나로 및 한국통신의 4개사가 각각 투자를 하고 있어 4중 투자가 되고 있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과잉·과당투자로 말미암아 경영부실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9조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20조가 더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중 투자에 대한 견해, 적정투자규모와 투자비용이 무엇입니까? 수익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가, 최소이용 가입자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鄭亨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委員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로부터 4,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의 김영재씨가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검찰이 이 김씨를 봐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것이 내일신문 11월30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피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속을 할 때 4,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을 했는지, 돈을 받으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지 4,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했다 이런 것이 아마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사상 없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을 보니까 5,000만원이 될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가지고 이 형량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것을 신인철 씨하고 관련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변호인을 하면서 검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4,950만원으로 해서 신인철 씨를 적어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4,950만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이 미화 2만달러 현금 7,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김씨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추가 기소를 한 모양인데 이러한 미화 2만달러 현금 7,000만원 이것이 적혀있는 비밀메모를 확보한 시점이 올 8월말인데 이것을 신씨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때, 8월에 발견해 놓고 검찰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안 했고 특히 9월2일에 신인철 씨에 대해서 영장청구하면서 돈 준 것은 빼놓았다가 지금 이것을 추가 기소하는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승현 씨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승현 씨가 금년 1·2월에 사직동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장관 알고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金正吉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鄭亨根委員 답변할 때 확인해 보세요. 사직동이 조사해 가지고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되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무슨 혐의로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위가 그동안에 98년 38억원, 99년 20억원 국비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12억여원, 기초가 47억원 등 127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썼고 또 직접 예산지원 외에 사무실 무상지원 등 간접지원 금액 외에 행자부에 민간단체 보조금 150억원 등 사실상 제2건국위 예산이 한 300억원에 이른다고 해 가지고 98년, 99년도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인가 여기에 39억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2000년도에 29억에 비해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사례모음, 시상대회 등 전시성 사업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제2건국위에 왜 이처럼 과다한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역을 보면 2주년 축하행사 경비로 1억 9,000만원, TV홍보 3억, 용역비 1억원, 여비 8,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제2건국 추진 예산은 중앙부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근거로 따로 예산을 배정하여 실제 예산규모는 더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행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제2건국위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원장은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재 씨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주민등록증 문제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지난해 9월부터 발급에 들어간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쉽게 지워지고, 넣었다

가 지으면 다 지어져 버립니다. 제가 실험을 하고 안 가져왔는데 자연탈색이 심하고 치명적인 결함으로 위조, 변조로 인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지난 4일 김모 양의 진술에 따라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아세톤을 떨어뜨린 실험을 한 결과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뒷면의 지문 등이 쉽게 지워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다시 지문을 찍으면 다시 지문이 찍혀서 위조, 변조를 막는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3,600여만장의 새 주민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이러한 예산이 모두 헛돈을 쓴 것이 되어 버렸다고 보고 있고 시험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주민증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한국조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기왕에 발급된 주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은 새 주민등록증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발급을 강행해서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새로운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金元雄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기 보면 9,0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17개 정부부처를 살펴보면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국가정보원, 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감사원, 총리실,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인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1일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특성상 예산에서 인정해 준 비용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17개 정부부처의 업무특성과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지 않은 여타의 정부부처의 업무특성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통일부,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국회 등은 직접적인 수사활동이나

특수활동과 연관이 없는 부처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건수사활동비의 경우도 수사기관에 사건수사활동비가 예산과목에 있음에도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중복편성하여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다음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문한 탓인지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내역공개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경비 사용내역이 밝혀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액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류로 확인하는데 다만 집행한 상대방의 인적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총액을 감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특정한 업무의 수행, 수사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특수활동비 수령자의 급여보전성 경비로 증액집행되고 있고 또 이것은 장관이나 차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감사원 국감시에도 특수활동비 증액지급과 특히 감사원 간부들에 대한 과도한 특수활동비 지급 의혹에 대해 질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부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원장이 그때 5,000만원을 매월 쓰고 총장이 또 3,000만원 쓰고 국장도 500만원 쓴다고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내역공개는 거부한 바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부처마다 굉장히 불투명하게 쓰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뭔가 좀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받으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과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저번에 차관께 질의를 하였더니 차관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태창메리야스 2,000만불 해가지고……. 1,000만불인가 지금 만들어서 북한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전북도에 있는 메리야스 하청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장관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북경수로사업 총 공사비 46억불 가운데 우리가 기여하기로 한 금액이 70%에 해당하는 32.2억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억불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2.1%, 환율 1,100원 기준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46억불 산출기준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환율이 1,210원을 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를 재산출할 경우 부담액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통일부내 대북경수로사업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데 국가 전체로 볼 때 환율상승과 나아가 추가폭락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 저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으며 현정부의 경제정책 미스로 말미암은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경수로사업 재원조달방법이 문제인데 통일부에서 추진중인 경수로분담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납부금제도 도입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안 계시고 차관이 계십니까?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민주당의 어떤 위원님께서, 아주 존경하는 우리 宋永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지금 전부 금융, 금융 이것만 자꾸 문제를 삼는데 저는 금융이, 은행에 아무리 공적자금을 넣어가지고 은행을 정상화시켜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계속 안 빌려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면 경쟁력이 없어서 이것이 고정이하로 부실이 되고 이러면 이것이 개미챗바퀴 돌듯이 도는 것인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점을 간과하고 계속 금융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 6월 현재 12월 결산 상장등록법인중 33%가 이자보상비율이 1이 못 되게 나타나서 세 개 기업 가운데 한 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4대그룹 계열 8개사 30대그룹의 36개사가 포함되어 있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경쟁력강화가 굉장히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난 달 말부터

산업자원부는 화학섬유, 면방,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전기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체들간에 자율적인 타결원칙 아래 스스로 흡수합병, 설비교환 등을 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저는 굴뚝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라고 생각하는데 이 되지 않은 금융산업……

시간이 있으면 제가 죽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코스닥 벤처 이것을 갖다가 뜻밖에도 저는 정부에서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굴뚝산업하고 연계된 벤처 코스닥이어야만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추겼고 머니게임으로 나이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서른 한 살 이렇게 된 애들이 수천억원씩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승현인가 하는 MCI에도 현재 재산을 이삼천억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생신이라고 해서 송탄시장을 130억인가 주고 사서 선물로 바치고, 나이 스물 일곱입니다. 이런 것을 부추긴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이제는 우리가 산업자원부의 산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정부는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서 독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나는 이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제도 악용사례가 급증하는데 지금 외국인투자 이것이 계속 증가하다가 10월에 17억4,600만불로 전년 동월 17억8,000만불에 비해서 1.1%가 감소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EU와 미국으로부터 투자가 31.7%, 2.8% 감소한 데 비해서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기타 지역은 133.4% 증가해가지고 전체 38.6%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M&A용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리타워텍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돈이 7월21일 아시아넷 인수자금 명목으로 1조4,000억의 현금이 리타워텍에 의해서 오후 10경 외국에서 들어와 다음날 새벽 2시에

빠져나갔는데 이것 가지고 리만부라더스의 초단기 대출금으로 시티뱅크 뉴욕지점을 통해서 M&A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투자다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투기성자금이다, 이것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재정경제부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제부의 모 국장이 로펌하고 서로 상의해 갖고 개인적으로 이것이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로 들어온 자금이라고 이런 증명서, 확인서도 써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타워텍이 5,000원짜리가 365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전체 규모가 4조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리타워텍…….

○法務部長官 金正吉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
니다.

○鄭亨根委員 법무부장관은 맨날 보고만 못 받으
시던데 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正吉 확인해 보겠습니다.

○鄭亨根委員 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검
찰에서도 사건을 배당했는데 굉장히 큰 사건인데
아주 신참, 초임 비슷한 검사한테 배당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알
아보세요.

○法務部長官 金正吉 예, 알아보겠습니다.

○鄭亨根委員 벤처지원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李起浩 경제수석이 지난 2일 최근 발생한 금고사
고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조사중이
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앞으로 한두 개 더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지금 실제로, 물론 주식시장이나 벤처 이것
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퀴즈되어 가지고 이런 문
제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K, 또 K 무슨 여러분 알
다시피 또 B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줄지어 대
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해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
기관의 여러 가지 보고서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속 터질
것인데 지금 진승현 MCI니 무슨 정현준 펀드 이
런 것은 유가 아닙니다. 이것 터지면 대형사고가
날 그러한 사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경제의 회생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질
의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회사를 거명을 하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까 저도 걱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오늘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이
어디입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벤처기업, 줄지어 있는 것 잘 알
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또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제가 계속하겠
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
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답변시간에 함께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질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밤늦게
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산회)

○出席委員(48人)

高 珍 富	權 琪 述	權 五 乙	金 景 梓
金 德 圭	金 文 洙	金 聖 順	金 榮 煥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元 雄	金 一 潤	金 貞 淑	金 洪 信
羅 午 淵	閔 鳳 基	朴 世 煥	朴 鍾 根
裴 基 善	孫 泰 仁	宋 錫 贊	宋 永 吉
宋 榮 珍	申 溪 輪	辛 基 南	申 榮 國
申 鉉 泰	沈 揆 喆	吳 長 燮	柳 三 男
柳 在 珪	尹 榮 卓	李 康 斗	李 根 鎭
李 洛 淵	李 相 洙	李 在 昌	李 漢 久
李 浩 雄	張 在 植	丁 世 均	鄭 宇 澤
鄭 哲 基	鄭 亨 根	咸 承 熙	黃 祐 呂

○請暇委員(1人)

李 海 瓚

○委員아닌出席議員(6人)

金 武 星	金 芳 林	李 完 九	李 在 五
千 正 培	許 泰 烈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회관

金 光 琳
張 基 泰
李 鍾 澤

국세청장
관세청장
차장

安 正 男
金 昊 植
李 大成 榮

○出席國務委員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陳 稔
朴 在 圭
金 在 正 吉
趙 成 台
崔 仁 基
李 敦 熙
徐 廷 旭
金 延 熙
韓 甲 洙
安 炳 燁
崔 善 政
金 明 子
盧 武 鉉
田 允 喆

조달청장
통계청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차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차장
산림청장
차장
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철도청장
차장
해양경찰청장
차장

金 尹 吳
金 大成 英
尹 吳 鉉
李 茂 永
李 李 憲
文 勝 廷
徐 廷 義
李 鍾 正
朴 銀 昌
申 洵 雨
金 容 漢
金 範 鎰

○出席政府委員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법제처장
차장
국정홍보처장
차장
국가보훈처장
차장

李 晶 載
梁 榮 植
潘 基 文
金 慶 漢
文 一 燮
金 在 榮
金 相 權
韓 錠 吉
金 順 珪
吳 盈 敎
金 東 善
張 錫 準
鄭 東 洙
金 相 男
姜 吉 夫
洪 承 湧
朴 珠 煥
鄭 壽 夫
吳 弘 根
李 圭 錫
金 有 培
金 鍾 成

중소기업청장
차장
특허청장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철도청장
차장
해양경찰청장
차장

韓 峻 皓
辛 東 午
林 來 圭
劉 永 詳
梁 奎 煥
鄭 鍾 煥
崔 吉 大
金 宗 佑
李 昶 祐

○監査院參席者

감사원사무총장

李 秀 一

○金融監督委員會參席者

위원장

李 瑾 榮

○憲法裁判所參席者

사무처장

朴 容 相

○中央選舉管理委員會參席者

사무차장

任 左 淳

○中央人事委員會參席者

위원장

金 光 雄
崔 錫 忠

○女性特別委員會參席者

사무처장

金 崔 錫 忠

위	원	장	白	京	男	
○公正去來委員會參席者						
위	원	장	李	南	基	
부	위	원	장	金	炳	日